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2021. 12.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의회학회 윤 은 기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2021. 12.

연구책임자 윤은기(동아대학교 교수)

연구자 강장석(전, 국민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과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동아대학교 교수 윤 은 기

요약문

- 주요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지속, 경제 지원 제공, 시장 기능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수단들을 추진하였는데, 광범위한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조치는 COVID-19 사건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시키고 있음.
- COVID-19 대유행은 기존의 경제적 상황과 공공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전략에서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재정과 통화정책이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국 사례들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들의 분석 들을 포함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주요국별 코로나 19 대응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추진
 - 독일은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 조업 지원으로 고용 안정성을 유지
 - 프랑스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
 - 미국과 유럽 등의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적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처하였는데, 미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은 유사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성 지원의 규모와 방식 및 대상선정의 차이일 것임(김준현외, 2021).
 -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를 정책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유로 지역의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재정위기의 기억,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부재, 재

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인해 무차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음(김준현 외, 2021:19).

- 유로 지역의 국가들이 무차별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지원을 한 이유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직접지급정책이 미래에 불러올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재정 공간의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임(김준현외, 2021)
 - 일본은 고용 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 싱가포르는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 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 중국은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및 사회보험 부담을 낮추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 19에 의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강구상외, 2020)
- IMF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대응한 과감한 재정책대 정책으로 2020년 선진국 재정적자/GDP는 10.7%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적자 규모인 8.7%를 상회할 전망이고, 2020년 국가별 재정적자/GDP 규모는 미국 15.4%, 영국 8.3%로 확대되고 전년에 흑자를 보이던 독일과 한국도 각각 5.5%, 1.8%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고, 이에 따라 선진국 정부 부채/GDP 비율은 122.4%로 2019년(105.2%)에 비해 17.2%p 증가할 전망(박성욱, 2020)
-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은 거시경제적 하방 위험을 대폭 완화하였고, 항공, 운송, 음식·숙박업 등 일부 내수업종을 제외한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확대, 반도체 및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은 전체 경제의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함(최홍식외, 2021)

-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 재정계획에서도 지속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세수는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과 위기 동안의 정책 조치로 인해 수년 동안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많은 단기 조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업 수당을 통한 장기간의 가계 부양이 노동 시장 활성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연장된 임금 지원은 또한 특히 실업 수당의 순 대체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직원 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음 (OECD, 2020)
 - 기업에 대한 확장된 지원은 봉쇄 및 완화 조치가 없었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좀비'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세금 감면 및 연기는 또한 중기적 수익 창출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음
 - 소비 및 투자 상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 회복의 열쇠로,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와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재정 부양책은 일시적·효과적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적자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저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부양이 소비 수요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봉쇄 조치가 예기치 않게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 정책 입안자는 억제된 수요와 경기 부양 조치의 조합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경기 부양 조치가 잘못된 투자나 자산 거품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기 부양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기 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허진욱, 2021:76)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사회적 변화 및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하고, 재정확대는 세수 기반 강화와 연금확충 등 장기적인 재정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금융시장의 변화에도 계속 대응해 나가야 하고,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 부채관리의 필요성도 커질 것임(최홍식 외, 2021)
-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과 더불어 자산가격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유동성 공급 규모 축소와 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금 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이바지할 것인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과정으로, 공공재정 복구에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고, 국가가 공공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세금은 세입 수준과 재정 건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시대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지속적인 경제 부양책을 통한 견고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1. 연구내용	1
2. 연구방법	11
제2장 해외사례 연구	12
제1절 배경	12
제2절 외국사례연구	14
1. 미국	14
2. 영국	27
3. 독일	38
4. 프랑스	46
5. 중화인민공화국	53
6. 일본	59
7. 싱가포르	67
8. 대한민국	73
제3장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78
제1절 지원 정책	78
제2절 정책 대응	87
제3절 각국의 조세정책 대응에서 얻은 교훈	92
참고문헌	99

표 목 차

〈표 1〉 미국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	19
〈표 2〉 일시적인 각종 금융규제 완화	8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시행과 함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하고,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전례 없는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수단들을 추진하였는데, 광범위한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조치는 COVID-19 사건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시키고 있음.
- COVID-19 대유행은 인구 고령화, 불평등 증가,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포함한 기존의 경제적인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공공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전략에서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재정과 통화정책이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국 사례들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들의 분석 들을 포함함
-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대응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해외 사례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대한 코로나 19 대응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의 제시와 함께 코로나 19 관련 의정 활동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유행은 많은 국가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했으며, 정부 수입이 감소하는 동안 대유행의 보건적, 경제적, 사회적 영

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지출이 필요하였고, 정부는 추가 차입 및 지출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재정 압박에 대처하고 있음

-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최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활동의 급격한 쇠퇴를 촉발했음. COVID-19 대유행은 건강 위기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전환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글로벌 GDP가 훨씬 더 크게 위축되었고, 지속적인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조치로 인해 현재 글로벌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건강 및 경제 회복을 지원했음. COVID-19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상당한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고용, 소득, 생산의 더 큰 감소를 방지하고 있음. 효과적인 백신의 지속적인 배포 및 지속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많은 경제 활동의 점진적인 재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국가별 영향은 코로나 19 발생 규모, 의료 인프라, 보건정책, 산업분포, 산업구조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존의 노력과 재정 여력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위기로 부터 회복하는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남
- 이 연구의 내용은 각국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대한 코로나 19 대응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해외사례 연구로, 전 세계 국가들은 2020년에 COVID-19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재정 조치를 추진하였고, 2020년~2021년에 국가들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분석 및 수단의 주요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함
- 코로나 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 19사태의 대응 전략으로 “개인의 생계 및 고용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 되고 있으며, 실업자, 휴직자,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강구상 외, 2020)
 - 주요국의 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미국과 싱가포르는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 및 고용지원” 정책을 추진하였고, 중국과 일본도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 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하였음(강구상 외, 2020)
-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실물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는 “세부 항목별 재정지출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생계 및 고용지원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 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주요국의 통화금융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주요국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실물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수단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의 금융정책을 통해 미 연준의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는 0~0.25%이고,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및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및 중기 유동성 지원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0.1%)를 유지함
-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 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이 2019년 GDP 대비 높은 비중을 보임.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의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강구상 외, 2020)
-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과 함께 금융시장에 자금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은 “기업 대출 및 지급보증을 통한 기업 대상 유동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강구상 외, 2020)

1) 미국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 바이든 정부 코로나 19 대응책 및 주요 재정정책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현재까지 입법 완료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3개의 정책 및 계획 모두 대규모 정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구윤모, 2021)
- 바이든 정부의 “①미국 구조계획법, ②인프라 계획, ③미국 가족계획 모두 합한 규모는 GDP 대비 26% 수준” 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코로나 19 대응 지원책의 총합산 규모 GDP 대비 약 20%(추정치)보다 6%p 확대된 수치임

2) 영국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 영국 정부는 가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 및 지출 조치들은 추진하였고, 현금 유동성 제공과 금리 인하와 같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들을 추진하였음
- 2021년 9월 24일과 11월 4일에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인 0.10%로 동결하는 한편, 자산매입 목표치를 종전 8,750억 파운드로 유지하기로 함(영국 BOE 통화정책, 2021)
- 12개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1년 7월 2.0%에서 8월 3.2%로 상승. 8월에 발표한 CPI 전망치인 3%보다 상향되었고, 2021년 3분기 영국 GDP 수준에 대한 전망치를 약 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해 코로나 19 이전의 수준보다 약 2.5%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이번 전망치 수정은 생산에 대한 일부 공급 제약의 출현을 반영한 것임(영국 BOE 통화정책, 2021)
- 최근 유례없는 상황에서 경제는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있고, 통화정책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영향 사이의 시차를 고려해 적절한 정책 기조를 판단할 때 일시적 요인보다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지난 8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예상대로 경제가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위해 예측 기간 동안 약간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됨(영국 BOE 통화정책, 2021)

- 금리를 동결했으나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한다면 “몇 달 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5%에서 7%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6%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내년 2분기에 4.8%로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영국 BOE 통화정책, 2021)

3) 독일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 코로나 19사태의 대응정책에서 독일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도입했고, 2020년 3월 중반부터 대규모의 긴급 자금투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에는 경기 악화를 막고자 종합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실시했음(강유덕, 2021)
- 독일은 저소득층의 거주 및 필수서비스 사용 권한을 보장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단축지원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였고, 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을 포함하여 615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2020년 6월 GDP의 3.9%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를 차세대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에 투자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강유덕, 2021)

4) 프랑스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 프랑스는 생계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50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수립했고, 프랑스는 2020년 9월 경기부양책인 동시에 경제개혁 정책인 ‘프랑스 재개계획(France Relance)’을 발표하여 2021~22년의 기간 중 1,000억 유로(GDP 대비 4.4%)를 투자하기로 하였음(강유덕, 2021)
- 중소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 시 소득세 감면(IR-PME)’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팬데믹 이전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 시 18%의 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비율을 25%까지 상향하였고, 이번에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연장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투자 유

치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음(곽미성, 2021)

5) 중국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 2021년 하반기 중국 국내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바,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시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임(안성배 외, 2021)
 - 2021년 상반기 중국 국내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과 국내외 경제 회복으로 경기가 원만히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코로나 19 재확산, 홍수, 산업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 2021년 하반기에 중국은 예산투자와 지방정부 부채 발행을 통한 하반기 투자를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하고, 시장에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
- 중국은 상반기 경기회복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2021년 하반기에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통하여 소비·투자 등의 내수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반기 중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정부의 세수 수입이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확대되었음(안성배 외, 2021)
-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요소들이 증가하고 하반기의 경제 성장 하방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할 방침임¹⁾(안성배 외, 2021)

1) 지난 6월 인민은행은 새로운 시장 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상업은행의 예금금리 상한을 ‘예금 기준금리+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을 확대함하고, 2021년 7월 15일 인민은행은 예금지급준비율을 0.5%p 하향 조정하여 사회융자 비용을 축소하였고, 재대출, 재할인 확대 및 3,000억 위안 규모의 소액대출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안성배 외, 2021)

6) 일본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 일본은행은 기존의 금융완화정책 및 코로나 19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2021년 7월 기후변화대응 관련 자금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1년 9월 22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의 자산매입 정책,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관리 및 2021년 3월에 새롭게 추가한 신규 제도를 유지하기로 함(안성배 외, 2021)
- 일본은행은 2020년 3월 처음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2020년 4월 담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금융기관별 지원 상한(1,000억 엔)을 폐지하는 등 기업 지원책을 확대해 왔고,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함에 따라 종료일이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되고(종료일 변경: 2020년 9월 30일→ 2021년 3월 31일→ 2021년 9월 30일→ 2022년 3월 31일), 2021년 7월 16일 일본은행은 거시경제 안정화의 일환으로 민간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고, 기후변화대응 투자·융자를 제공하는 민간금융기관에 1년의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발표함(안성배 외, 2021)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재정이 악화되면서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PB: Primary Balance) 흑자 전환 및 GDP 대비 정부 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소비세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 19 대응으로 세출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 건전화 목표를 재검토할 예정임(안성배 외, 2021)
- 일본 정부는 세수를 높이하고자 2019년 10월 소비세를 인상(8%→10%)하여 소비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총 76조 엔)하여 PB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2021년 7월 21일 일본 정부는 향후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경우에도 PB 흑자 전환은 2027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올해 안으로 코로나 19의 경제·재정 영향력을 확인하고 재정 건전화 목표를 재검토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는 2022년 예산방침에서 세제 효율화를 강조하였으나, 신성장 분야 지원과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경제대책 수립 및 추경 편성 지시에 따라 재정지출은 증가할 전망이다(안성배 외, 2021)

7) 싱가포르의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

- 싱가포르의 경우, 코로나 19 정책 대응은 보건 및 중소기업·취약계층 대상 소득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별기업 및 국영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홍성창외, 2021)
- 보건 부문 지원: ① 코로나 19 백신 확보 및 접종,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기금 마련 ②코로나 19 검사·치료 및 예방역량 확충
- 소득지원: ① 피해부문 중소기업 대상 임금보조금 및 구조조정 지원 ② 중 저소득 노동자 대상 지원금 제공 ③ 항공, 예술·문화, 교통 부문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지원금 제공
- 장기용자 지원과 기업 자본금 지원 : 선별기업 대상 대출 신용 보증 제공 및 국영 투자기업 대상 자본금 지원
-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① 금융기업 대상 자금지원 ② 외환은행 대상 미화 지급을 통한 달러 유동성 완화

8) 선진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대응

(1) 가계 지원정책

- 현금 지급, 실업 수당 등 복지확대, 세금 및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가계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고용 유지 지원함(박성욱, 2020)
- 위기 상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 완화,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실업보험 등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하되, 부족한 부분은 한시적인 제도를 신설
- 현금 지급 정책으로 전 국민(홍콩, 싱가포르, 일본) 혹은 대부분(미국)을 대상으로 일정액 혹은 자산/소득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감소를 완화
- 고용 유지 정책으로 기존의 조업단축 지원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완화(독일)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미국, 영국)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보상하거나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 지급

- 실업 수당 등 복지확대 정책으로 실업 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수급기간 및 수급대상을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등에게까지 확대(미국)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당을 인상 혹은 지원조건을 완화(독일, 영국)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 납부유예 및 감면정책으로,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지방세 납부유예(미국, 영국), 주택임대료, 공공요금 납부유예(독일, 일본), 주택 모기지 상환유예 혹은 연체 때 담보권 행사 중지(미국, 영국) 등을 통해 가계의 생활비 지출 부담 경감

(2) 기업 지원정책

- 대출·보증 확대, 현금 지급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금 등의 유예·감면을 통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지원, 고용 유지 유도를 위해 대출뿐 아니라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지원을 한시 도입함. 대출 및 투자 지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 지분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공급함(박성욱, 2020)
- 미국 중소기업청의 경제손실 재해 대출은 일시적인 수입 감소를 겪는 소기업 및 농업기업에 지원하고 \$1만까지 상환면제 및 미국은 직원 1.5만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메인스트리트 대출을 도입하고 대기업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으로 지원
- 독일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대상 3개월 운영비를 종업원 5인 이하 기업은 최대 €9 천, 6~9인 기업은 최대 €1.5만까지 지원 및 독일은 정책금융기관인 KfW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신규 온랜딩 대출을 도입하고 대기업은 경제안정화기금을 통해 채무보증, 자본확충,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
- 영국은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영업소득 감소 보상제도 도입 및 영국은 중소기업에 1년간 대출이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80~100%의 정부보증을 제공하고 대기업에는 80% 정부보증을 제공하며 스타트

업·혁신기업의 투자를 유도

-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유예(미국, 독일, 영국), 부가세 인하(독일), 전기세 감면(독일) 등을 통해 기업의 지출 부담을 경감

(3) 통화금융 정책 대응

- 미 연준, 영국 등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 연준은 재무부 승인, 환안정기금(ESF) 및 예산으로부터의 자본 투자, 중소기업청 보증 등을 통해 신용 보장, 금융기관 및 단기자본시장 지원제도(PDCF, CPFF, MMLF, TALF)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유사 제도가 활용되었으나 채권 및 대출 시장을 지원하는 제도(PMCCF, SMCCF, MLF, PPPLF, MSLF)는 코로나 19위기로 신규 도입함(박성욱, 2020)
- 미 연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및 미 국채 담보부 레포거래를 통해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 단기간(2021.3.17~4.9)에 9개의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채권 및 대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함
- 주요국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여 자산매입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 조기 차단하고, 단시일 내에 금융기관과 신용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함(박성욱, 2020)
-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뿐 아니라 채권시장 및 대출 시장에 직접 신용을 공급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코로나 19 경제위기가 실물부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융 부문을 통한 간접적인 자금공급이 신용경색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직접적인 신용공급수단을 동원하고, 금융기관이 실물부문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을 완화함(박성욱, 2020)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 저서, 외국 번역서, 논문, 사례집, 발표 자료 등 다양한 문헌 및 학회와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최한 토론회,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재정 및 통화 금융정책에 대한 저서, 연구논문,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함

제2장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배경

- COVID-19의 발생으로 중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활동 감소가 발생하였음
- 봉쇄 및 완화 조치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고, COVID-19 위기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충격을 모두 초래했고, 이러한 조치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코로나 위기와 함께 기업 및 가계 수요를 감소시켰음
- OECD 추정에 따르면 봉쇄 및 완화 조치는 일부 국가에서 초기 경제 활동의 약 25% 감소의 원인이 되었고, 소비자 지출은 초기에 약 1/3 감소하였음 (OECD, 2020)
- 많은 국가가 이미 봉쇄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조치를 했는데, 경제정책 조치의 초점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취약한 가계에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음
-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대응이 필요했음. 다자간 협력과 조정은 회복 경로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충격에 대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조율된 G20 행동 계획은 글로벌경제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정부가 COVID-19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 및 완화하고 시민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했음
 - 억제 및 완화 조치가 완화된에 따라 경제활력의 유지와 함께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으로 초점을 두고 있음
 - 국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업의 생존을 돕고 가계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이바지하고 있는데, 다자간 협력은 회복과 미래 충격에 대한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에 필수적이고, 건전한 공공 재정의 회복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모색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병(COVID-19)의 발병률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력도 제한할 수 있음. 많은 국가에서 감염률을 낮추고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봉쇄 및 완화 조치를 도입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추가 발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병 위험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는 2단계로 이동하고 있음
- 팬데믹과 관련된 정책 목표로 당면한 정책과제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임
 - 첫 번째 과제는 집중 치료 능력과 보호 재료 공급을 늘리고 치료법 및 백신 개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의료 시스템의 역할 및 기능을 개선
 - 두 번째 과제는 가정과 기업에 대한 봉쇄 및 완화 조치의 역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에 적응하는 동안 경제가 유희 상태가 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세 번째 과제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지속하는 재정 및 통화금융 프로그램을 지속
 - 마지막 과제는 경제 및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의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 및 전염병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시스템의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포함
- 결과적으로, 7개국의 각국이 코로나 19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조세 및 재정 조치를 살펴보고, 위기와 억제가 지속하는 동안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재정 부양책과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보건 위기가 완화와 억제 및 완화 조치가 제거된 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치들의 검토와 함께 건전한 공공재정정책의 수단과 방법들을 고찰함

제2절 외국사례연구

1. 미국

1) 재정정책

- 2020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백신 개발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을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19 「긴급예산법」에 서명함²⁾(강구상 외, 2020)
- 유급휴가 및 유급 병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을 위해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긴급예산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서명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급휴가 및 유급 병가 지원, 중소기업 유급휴가 비용 세제 혜택 제공, 유급 자녀 돌봄 휴가 혜택 제공 등을 추진함(강구상 외, 2020)
- 3월 27일 중소기업 지원, 가게 현금지원, 긴급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한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법」 통과되고,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실업급여 지급, 의료장비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지원정책임(강구상 외, 2020).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하고, 4차 경기부양책은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도로, 고속도로, 다리, 터널 등 인프라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식당·공연장(restaurant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식당·공연장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강구상 외, 2020)
- 2020년 1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통합 세출법의 일환으로 미화

2) 83억 달러 가운데 81%(67억 달러)가 미국 내 대응조치를 위해 사용되며, 19%(16억 달러)는 국제적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데, 미국 내 대응조치(67억 달러)에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리서치 및 백신 개발,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62억 달러가 사용되며, 향후 10년 동안 원격 헬스케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도 5억 달러가 사용되고, 국제적 대응조치(16억 달러)에서 9억 8,600만 달러는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에 배정되며, 질병통제예방센터(3억 달러)와 국무부(2억 6,400만 달러)에도 지급됨(강구상, 2020)

8,680억 달러(GDP의 약 4.1%)의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및 정부 자금 지원 법안에 서명함. 이 법에는 3월까지 매주 미화 300달러의 연방 혜택이 강화된 실업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에게 \$600의 직접적인 경기 부양비, 백신 자원, 검사 및 추적, K-12 교육 자금 지원함

○ 2020년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법안에서 제공한 특정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의 만료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함

- 추가 실업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재해 구호 기금에서 440억 달러 사용
- 계속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경감
- 직원의 사회 보장 급여 세금의 추징을 연기
-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가 퇴거 및 압류를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

○ 미화 4,830억 달러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건강 관리 강화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위한 미화 620억 달러
- 병원에 미화 750억 달러
- 바이러스 검사 확대를 위해 미화 250억 달러

○ 미화 2조 3천억 달러(GDP의 약 11%)로 추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보안법("CARES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에게 일회성 세금 환급을 제공하기 위한 미화 2,930억 달러
- 실업 수당 확대를 위한 미화 2,680억 달러
-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품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250억 달러
- 대출, 보증 및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화 5,100억 달러
- 근로자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미화 3,490억 달러의 탕감 가능한 중소기업청 대출 및 보증

- 병원에 미화 1,000억 달러
 - 주 및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데 미화 1,500억 달러
 - 국제 지원에 미화 499억 달러
- 2021년 3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1조 8,440억 달러(2020년 GDP의 약 8.8%)의 비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구호를 제공하는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서명함. 이 계획은 공중 보건 대응에 투자하고 가족, 지역사회,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실업 수당 프로그램(추가 실업 수당 포함)을 확장하고,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1,400 달러의 직접 경기 부양비를 지원하고, 주 및 지방정부에 직접 지원을 제공함
-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함(이규한 외, 2021)
- 취임 초기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구호법안(금년중 9,000억달러)을 시행하고 별도의 새로운 경기부양책도 추진
 - 낙후 SOC 정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21~24년중 2.3~2.7조달러)
 -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21~24년중 1.6조달러)
- 대기업 및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함(이규한 외, 2021)
- 법인세 최고세율 21% → 28% 및 소득세 최고세율 37% → 39.6%로 인상으로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
 - 고소득층(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중산층 이하 가구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
 - 바이든 세제개편으로 2022년 상위 1% 소득계층의 세후소득은 15.6% 감소하는 반면 중위계층(상위 40~60%)은 1.1% 증가

(1) 코로나 19 대응 적극적 경기 부양

-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함(이규한 외, 2021)
 -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2, 3차 재확산을 거치면서 회복세가 주춤하였고, 코로나 19 발생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2.7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
 - 2020년 11월 개인소비지출(전월 대비 -0.4%)은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코로나 19 확산세로 경기 부진 우려가 심화되자 2020.12월 美 의회는 9,000억 달러(GDP 대비 4.2%)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5차 재정지원법안)을 도입
 - 추가 실업 수당, 가계 현금 지급, 소기업 지원, 백신 배포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금년 상반기 중 집행 계획
 - 2020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부양책의 규모가 코로나 19 충격 상쇄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재정부양안(1.9조달러, GDP 대비 8.9%)을 발표

(2)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주요 공공인프라가 1930~60년대에 건설되어 전체 인프라 평균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현재 매우 낙후된 상황이고, 2016~2025년 중 미국의 공공인프라 투자 부족액은 1조 4,440억 달러로 이에 따른 경제손실은 3조 9,550억 달러로 추산되고, 낙후 시설 정비, 자동차 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임기 중 2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이규한 외, 2021)
- 한편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R&D 투자

등에 임기 중 7,000억 달러 예산을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Buy American, 4,000억 달러)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고,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3,000억 달러)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이규한 외, 2021)

(3) 대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책대 기조는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 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규한 외, 2021:2-5)
 -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지출 및 세수감소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19년 79.2%에서 2020년 98.2%로 급격히 확대
 -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책대를 위해서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
 - 바이든 공약 이행 시 지출은 2021~30년 중 7.3조 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1조 달러 증가에 그쳐 총 3.2조 달러 적자 발생
 - 트럼프 정부의 국채 순 발행 규모는 연평균(2020년 제외) 0.9조 달러 수준이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보다 큰 폭 확대될 가능성
 - Yellen 재무장관 내정자(前 연준의장)는 연준과 재무부 간 정책 공조 강화(저금리 기조 유지 등)를 통해 신정부의 재정책대를 뒷받침할 필요성
- 주요 정책과제 예산안 발표 전에 공개된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 재건과 함께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가족 관련 지원(아동 세액 공제 확대 및 돌봄 관련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인프라 관련 정책 사업 약 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 일반 및 주요 도로 등의 현대화 계획 및 소규모 다리(농업지역 및 지역사회 포함) 1만 개 재건, 낡은 파이프라인 교체 등을 통한 물 기반 시설재건 등과 가족계획 관련 정책 사업으로, 모든 3~4세 아동의 무상 조기교육 제공, 저소득/중산층의 교육 서비스 추진, 보육료 적정 가격화, 양질의 보육 인프라 투자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훈련 지원 등이 포함(윤성주 외, 2021:22)

- 바이든 정부의 최근 정책들은 바이든 아젠다(Build Back Better)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들로서 최근 정책들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구윤모, 2021)
- (1단계) 미국 구조개혁법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보건 지출, 백신 공급, 재난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 극복을 최우선 과제
- (2단계)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국가 인프라 재건 및 녹색 경제 등 보건 외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인프라 계획을 발표
- (3단계)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교육 및 보육 등 인적자원 투자 확대에 초점

<표 1> 미국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

	미국 구조개혁법 (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 계획 (American Jobs Plan)	가족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총 규모	약 1.8조 달러	약 2.2~2.3조달러	약 1.8조달러
주요 내용	■ 실업수당 지급 ■ 제3차 재난지원금 ■ 대규모 세액공제	■ 운송 인프라 ■ 청정에너지 인프라 ■ 교육·보육 및 주택인프라 ■ 제조업 및 R&D 인프라 ■ 돌봄 인프라	■ 교육 ■ 가정 및 아동 ■ 각종 세액공제 연장
주요 목적	■ 코로나19 대응 중심	■ 일자리 창출 ■ 인프라 재건 ■ 중국과의 경쟁 우위	■ 가정 관련 지원 중심 ■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정책 기간	■ 단기	■ 8년	■ 10년
주요 재원 조달	-	■ 법인세 개혁 중심	■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조정 ■ 조세격차 감축 등

자료: 구윤모, 2021.

- American Jobs Plan(인프라 계획)의 총 계획 규모는 약 2.2~2.3조 달러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향후 8년에 걸친 정책으로서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인프라 재건(rebuilding), ■중국과의 경쟁 우위(out-compete) 구축 등 크게 3가지의 목표이고, 주요 내용은 ■운송(자동차 전기화 포함) 인프라 (6,210억 달러), ■병원/연방/건물/학교시설/주택 인프라 현대화(3,780억 달러), ■제조업 및 R&D 인프라(5,800억 달러), ■장기 요양 등 돌봄 인프라(4,000억), ■클린 수자원 인프라 재건/전력 인프라 교체/광대역 통신망 확대(3,11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됨³⁾(윤성주 외, 2021)
- American Families Plan(미국 가족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지출 규모는 총 약 1.8조 달러로, 아동 빈곤 감축 등 자녀 세대와 가정에 대한 투자, 미국 경제와 노동자의 미래 투자를 통한 세계경쟁력 지원, 중산층 확대 등의 전반적으로 모든 미국민의 경제 성장 이득 공유 확대 등이 목표이고, 미국 가족계획은 ■교육(5,060억 달러), ■가정 및 아동(4,950억 달러), ■각종 세액 공제 연장(8,550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가족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임⁴⁾(윤성주 외, 2021)
- 이 계획의 주요 재원조달 방법은 법인세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계획과는 달리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주안점을 두고, 고소득 가구 세금 인상(8,000억 달러 수입 전망) 및 조세격차(tax gap) 감축(7,000억 달러 수입 전망) 등을 통한 수입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10년

-
- 3) 인프라 계획은 인프라 재건 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혁 방안(The Made in America Tax Plan)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향후 15년 안에 인프라 관련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입 확충 계획을 언급하면서 기존 21% → 28%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조세 수준이 낮은 국가로 이동시켜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글로벌 최저세율을 인상(10.5% → 21%)하도록 제안함(윤성주 외, 2021)
 - 4) 미국 가족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3~4세 아동 무상 교육, 2년 전문제 대학교 학비 무료,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Pell Grants) 확대 및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유급 가정휴가 및 병가 프로그램 도입, 여름 동안의 학생 가정 식료품 지원(EBT) 확대와 함께 미국 구조계획에서 규정한 아동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2025년까지 연장 및 무자녀(childless workers)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영구화와 아동 보육·부양가족 세액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확대 및 영구화가 포함됨(윤성주 외, 2021)

동안 1.5조 달러 수입을 계획함⁵⁾(윤성주 외, 2021)

2) 통화금융정책

- 연준은 3월 3일과 15일 기준금리를 각각 0.5%p, 1.0%p 인하하여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함(강구상 외, 2020)
 - 3월 23일 미 연준은 국채와 주택대출담보증권(MBS)을 무제한 매입하고, 자산담보증권(ABS: Asset-Backed Security)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함께 은행의 총손실흡수능력(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규제를 완화해 은행이 가계와 기업 대출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4월 9일 연준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모든 규모의 가계 및 사업장을 지원하고, 코로나 19 확산 기간 동안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과 주 정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 금융 및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한국 중앙은행과 각각 600억 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중앙은행과는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체결
- 연준은 또한 CARES 법에 따라 책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재무부가 지원하는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시설을 도입함
 - 기업 및 시 발행인의 상업어음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상업어음 자금조달 시설
 - 광범위한 투자 등급 증권을 담보로 하는 연준의 24개 주요 딜러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딜러 신용 시설

5)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 → 39.6%) 및 가구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세율 3.8% 일괄 적용(현재는 일관성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고, 연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 39.6%로 인상함(윤성주 외, 2021)

- 주요 시장 기업 신용 시설회사로부터 새로운 채권과 대출을 구매
- 미결제 회사채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2차 시장 기업 신용 신설
-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 카드 대출, 중소기업청에서 보증하는 대출 및 기타 특정 자산으로 담보된 자산 담보부 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간 자산 담보부 증권 대출 신설
-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유동성 시설(PPPLF)은 중소기업에 직원이 급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 따라 대출을 시작하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
-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또는 확장 대출 구매
- 주 및 적격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단기 어음을 구매

- 주 정부의 예상보다 강력한 세수 징수액과 연방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주 및 지방재정에 대한 압력을 일부 완화했음. 그러나, 2020~2022년 사이에 지역 및 지방정부에는 여전히 4,67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히고 2022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하위 국가 세수의 17%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함.
- 지역 수준에서 주들은 메디케이드 지출의 증가와 함께 개인소득세, 판매세, 법인 소득세 수입의 강력한 감소에 직면함. 카운티 차원에서 전국 카운티 협회의 최근 보고서는 카운티 생성 세입(예: 판매세)의 손실과 주 자금지원의 손실로 인해 2021 회계연도까지 카운티 정부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전국도시연맹이 90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유행의 첫 9개월 동안 지자체는 약 21%의 수입 감소와 17%의 지출 증가를 경험함. 이러한 손실은 중요한 공공 안전 서비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임금 및 일자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프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회복과 함께 지방세수 증가와 지방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주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주 및 지방정부마다 다름

- 특히 레저, 관광, 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집중적인 경제 활동이 위협 요인임. 관광업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주들은 세입 손실, 실업률 급증, 경제 활동 감소로 인해 신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회복 기간 상당한 지연에 직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하와이와 네바다 주는 관광업이 그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주로 여겨짐

○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보장(CARES) 2조 달러 중 1,500억 달러의 보조금이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기금을 통해 책정되어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왔음. 케어법은 또한 교육안정기금에 307억 5천만 달러를 할당했음

○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은 국가에 할당된 메디케이드의 비율을 6.2% 포인트 올렸음. 기금 사용일은 2021년 통합지출법(미국 재무부, 2021)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음. 또한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현금 흐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최대 5천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시 유동성 시설을 설립했음(Federal Reserve, 2020). 이러한 조치들은 2021년 2월에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법의 일부인 주 및 지방 코로나바이러스 재정 회복 기금법으로 보완되었음

○ 미국에서 연방정부는 COVID-19 위기 이후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2021년 3월에 발표함. 이 계획은 주 및 지역사회에 운송, 수도, 전기, 디지털 및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자금지원을 제공함

- 6,210억 달러의 교통 인프라 및 복원 프로그램 · 인프라 복원력 향상을 위한 500억 달러의 투자
- 1,110억 달러의 물 인프라 투자
- 1,000억 달러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 1,000억 달러의 전력 인프라 투자
- 2,130억 달러의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 이 계획은 국가, 주 및 지역 차원에서 디지털적이며 포괄적인 우선순위를 지향하는 직접 투자를 제안함. 이 계획은 50만 대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 정부가 지속 가능한 포괄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을 제안함
-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보안법(CARES Act)이 지역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준비,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청(EDA)에 15억 달러의 경제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함. EDA의 복구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지원을 추진함
 - EDA의 경제 개발 지구(EDD), 부족 보조금 및 대학 센터에 대한 기술 지원, 기업 혁신을 위한 자본의 지원
 - 인프라 건설 및 기타 경제 개발 프로젝트 지원
 - 고용 창출, 백신 보급 지원, 중요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 지방 및 지역 정부에 3천 5백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할당
 - 주 정부 및 지방정부 기금은 교육에 대한 적절한 자금후원과 저소득 지역 사회 학생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후원
 - 경제개발청은 주 및 지방정부 기관,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통해 상향식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승인
 - 가정 에너지 및 수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50억 달러 패키지에는 주 정부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이 포함
- 요약하면,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 대책법을 통과시켜 총 2조 1,083억 달러(약 2,57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지원, 기존 실업 수당의 인상과 기간 연장, 긴급실업수당의 도입 등 직접적 소득보조 방안과 함께 연방 중앙은행(FRB)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재윤외, 2020:2)

-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김준현외, 2021). 융자금을 지급 받은 후 8주 이내에 임금 등의 인건비성 경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forgiven)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재정적 지원으로 볼 수 있음(김준현외, 2021). 미국은 2020년 3월, 4월, 12월 및 2021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총 9,6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김준현외, 2021)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SBA Disaster Loan),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긴급 보조금(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기타 재정지원(독립 영화관 및 문화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공, 운송서비스(버스 및 페리 등) 제공업체에 대한 보조금 제공, 식음료점에 대한 보조금 제공) 등의 재정적 지원이 1,74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김준현외, 2021)
- 가계현금지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급이 총 8,610억 달러 규모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김준현외, 2021)
- 임차료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거주권 및 영업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70억 달러, 250억 달러, 216억 달러 등 총 636억 달러의 임차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음(김준현외, 2021)

3) 예산

- 미국의 FY2022 회계연도는 2021.10.01.~2022.9.30이며, 미국 2022년 예산안인 Budget 2022가 2021.5.28. 발표되는데, FY2022 재정지출 규모(6조 달러)는 추가부양책까지 포함한 FY2021 추정치(7.2조 달러)와 FY2020 실적

치(6.6조 달러) 대비해서는 감소하고, 예산안 기준으로는 FY2020(4.7조 달러) 대비 FY2021(4.8조 달러) 증가함(기획재정부, 2021)

- 연방채무는 FY2022부터 매년 GDP 대비 약 1%P 내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FY2026~FY2031에는 상대적으로 소폭(0.2P~0.3%P)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⁶⁾(기획재정부, 2021)
- “Build Back Better” 아젠다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3월에 입법(3.11.)된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바탕 위에 ① 미국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 ②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중심으로 편성(기획재정부, 2021)된 내용⁷⁾은 다음과 같음
- 인프라 재건과 함께 가정 중심의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국가 생산성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운송, 다리, 항만, 공항, 철도 시스템 등 재건 및 약 2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 일반 및 주요 도로 등의 현대화 계획 및 소규모 다리(농업지역 및 지역사회 포함) 1만 개 재건 등이 포함되고, 아동 및 교육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모든 3~4세 아동의 무상 조기교육 제공, 흑인 지역사회 교육 신장을 위해 설립된 대학(HBCUs) 등 저소득/중산층의 저렴한(affordable) 교육 서비스 추진, 보육료 적정 가격화, 양질의 보육 인프라 투자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훈련 지원 등이 포함(기획재정부, 2021)
- 미국 경제는 2020년 △3.5%, 2021년 5.2%, 2022년 4.3% 성장하며, 실업률은 2020년 8.1%, 2021년 5.5%, 2022년에 4.1%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FY2022 재정적자는 전년(FY2021) 추정치 대비 약 50% 감소한 1조 8,370억 달러(GDP 대비 7.8%) 전망됨(기획재정부, 2021)

6) 미국 정부는 현 경제 상황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주요(critical) 정부 투자에 대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건/은퇴 프로그램 관련 지출 등의 재정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 재정적자 감소 계획임(기획재정부, 2021)

7) 기후 변화 대응에 맞춘 교통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광대역 연결 인프라 재건, 보육/돌봄 인프라 확립과 함께 미국 제조업 회복, 공급망 확보, R&D 투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아동수당과 근로장려세제 등 대규모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 보육 투자 확대 등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위한 인적 자원 투자 확대 계획임(기획재정부, 2021)

2. 영국

1) 재정정책

- 영국의 영란은행은 3월 10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였고, 영국 정부도 12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함(정지현 외, 2020:5).
 - 영란은행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인하하였고,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
 - 정부는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50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
 - 병가수당(statutory sick pay)을 자가격리자에게 확대 적용
 - 지방세 면제를 위한 지방정부 구제 기금 조성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및 세금 납부유예
 -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세금 면제
 - 실업 수당·구직수당을 위한 조건 완화 등
 - 주당 94.25파운드(원화 약 14만 5,000원)로, 고용인 2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4일까지 총 소요 재정은 20억 파운드(원화 약 3조 870억 원)로 예상
- 영국 정부는 9월 24일 재정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여 피해 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에게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함(장영욱, 2020:12).
 - 관광, 의료 부문에 대해 2021년 3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20% → 5%).
 -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문을 닫는 사업장의 경우 직원 급여의 3분의 2(급여의 67%)를 매달 최대 2,100파운드까지 지원하고, 고용주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보장받음(1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
 - 코로나 고위험 지역의 의료, 숙박, 레저 부문 사업장들에 최대 2,100파운드의 보조금 일시 지급
- 영국의 재정정책은 FY2020-21부터 FY2025-26까지 경기 부양적 기조가

유지될 전망으로, FY2020-21과 FY2021-22에 금융위기 때보다 더 부양적인 정책으로 2020년 예산을 포함해 현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전반적으로 FY2023-24까지 매우 부양적이고, 2021년 예산안의 추가 조치도 FY2022-23까지 경제를 계속 부양한다는 내용임⁸⁾(윤성주 외, 2021)

- 영국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함께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프라·교육역량·혁신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함⁹⁾(윤성주 외, 2021)
- 건강 비상사태 동안 가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및 지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됨
 - 재산세 면제, 중소기업 및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병가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기업지원 조치(290억 파운드).
 -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에 따른 지불을 늘리고 기타 혜택을 확대하여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80억 파운드).
- 정부는 기업의 신용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 별도의 제도를 시작했음.
 - British Business Bank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지원하고, 전자는 최대 500만 파운드, 후자는 최대 3억 파운드까지 대출에 대해 80% 보증을 제공
 - 정부는 최대 £50,000의 대출 금액을 100% 보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바

8) 예산안에서 FY2021-22에 재정확대를 위한 약 600억 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용 유지 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 제도 연장 및 기타 한시적 조세 감면 연장하고, 법인세율 인상, 소득 기본공제액 동결, 부처별 경리지출 한도 하향 조정하고, FY2023-24부터 재정 축소를 위한 계획임(윤성주 외, 2021)

9) 인프라(Infrastructure) 투자에서 통신·도로·철도·도시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데, Levelling Up Fund, Shared Prosperity Fund, Towns Fund, High Street Fund 등을 통해 영국 전역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탄소 배출 순제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억파운드의 자금을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에 투자하고, 직업교육(Further Education) 개선에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16세 이상 기술 교육 시스템 개혁과 같은 양질의 훈련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향후 고성장 및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영국 경제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지원·장려하고, 고성장 기업에 투자하도록 연금 기금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지속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윤성주 외, 2021)

운스뱅크 대출 제도를 시행

- 2020년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계연도 말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를 6개월 연기
- 정부는 자영업 근로자(Self 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SEISS) 및 일시 해고(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 직원 소득의 80%를 초기에 지급(직원당 최대 월 2,500파운드) 할 수 있고, 해고된 직원의 경우 10월 말까지 이 제도를 연장했음. 정부 보장은 9월에 임금의 70%(최대 £2,187), 10월에 60%(최대 £1,875)로 떨어졌으며 고용주는 차액을 임금의 80%(최대 £2,500)에 이바지해야 했음.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는 3개월 더 연장되었지만 소득의 70%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정부는 보조금과 대출을 통해 혁신과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파운드의 패키지를 마련하였고, 국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IMF의 재난 억제 및 구호 신탁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제공하고 새로운 2파운드를 제공하였고, 저소득 국가가 COVID-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IMF 빈곤 감소 및 성장 신탁(PRGT)에 20억 대출을 지원함
- 2020년 7월,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함
 - 장기 실업의 위험에 처한 젊은 근로자를 위해 6개월 동안 주당 25시간의 최저 임금을 지급
 -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용 시장에서 재투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 증가
 - 접대, 숙박 및 관광 명소에 대한 VAT 세율 및 부동산 거래세의 일시적인 감면
 -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개조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 포함)
 - 8월 한 달 동안 외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자가 격리가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가족, 각각 £130 및 £182를 지원
 - 지역적 폐쇄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은 3주마다 최대 1,500파운드를 지원

- 2020년 9월 24일에 발표된 일련의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 소득지원 제도를 연장하고 최대 총 £1,875 지원
 - 관광 및 숙박 부문에 대한 일시적인 15% 포인트 감세(20%에서 5%)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
 - 3월 말까지 이연된 부가가치세 납부를 11회 분할납부하고, 2020년 7월과 2021년 1월 납부 예정인 자가 과세 소득세를 12회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
 - 정부는 최소 13주 동안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인 JETS(Job Entry: Targeted Support)를 시작
- 2020년 11월 25일, 정부는 FY2021-22 지출 한도를 설정한 2020 지출 검토를 발표했으며 OBR은 수정된 재정 전망을 발표했음. FY2020-21의 경우 Covid-19 지원 조치는 2,800억 파운드로 추정되고, 2021-22 회계연도에 정부는 이를 위해 550억 파운드를 할당했음. 다른 용도 중에서 이 기금은 코로나 검사, PPE 및 백신뿐만 아니라 장기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3년 재가동 계획에 할당될 것임
- 2021년 1월 5일, 영국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기업을 위한 46억 파운드의 새로운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발표함. 이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최대 9,000파운드를 청구할 수 있는 약 600,000개의 소매, 접대 및 레저 회사에 대해 40억 파운드의 일회성 “추가 보조금” 그리고 5억 9,400만 파운드의 새로운 재량 기금은 시의회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음.
- 2021년 3월 3일, 영국 정부는 590억 파운드(GDP의 거의 2.6%)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음. 이는 올해 추가로 430억 파운드에 달하는 바이러스 관련 지원 조치와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157억 파운드의 추가 조치로 구분됨
 - 가게 지원에는 약 200억 파운드(이 중 자영업 부분은 130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휴가 계획(7월부터 축소될 예정이지만)에 대한 6개월 연장이 포함
 - 기타 조치에는 보편적 신용 혜택 지급 인상(22억 파운드)을 6개월 연장하

고,接客업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인하(50억 파운드)를 9월 말까지 연장(단계적 환급 포함)이 포함.

- 현재 인지세 인하를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주류 및 연료 관세 동결(11억 파운드). 사업 보조금의 형태로 추가자금이 제공됨(50억 파운드)
- 할인된 사업세율은 올해 말까지(60억 파운드) 연장되었으며, 이는 미래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관대한 세금 감면

○ 요약하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19 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금융감독원, 2020)

- 영세업체 보조금 지급(Cash Grants Scheme)으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운영자금(£ 10,000~£ 25,000) 지급
- 긴급 사업대출(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대출금의 80%를 정부가 보증하는 긴급 특별대출 시행
- 세금납부 연기(Deferring VAT and Income Tax Payments Scheme)로 부가세 납부 자동연기 및 소득세 납부유예 및 연기
- 고용 유지 지원금(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으로, 회사가 직원을 계속 고용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 급여의 80%(최대 월 £ 2,500)까지 보조
- 자영업자 소득 지원금(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으로, 코로나 19로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일정 소득(자영업자 월 평균소득의 80%, 최대 월 £ 2,500)을 정부가 지원

(1) 코로나 대응 정부재정지원 방안

○ 영국 정부는 당초 2021년 3월 또는 4월경까지만 지속하고자 했던 코로나 대응 정부재정지원을 연장하기로 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 일자리 유지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는 2021년 9월까지 지원을 연장함. 다만, 봉쇄 조치가 완화된에 따라 7월부터는 근로자 휴무시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8월 및 9월에는 20%로 상향(임종수, 2021)

-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와 관련하여, 첫 번째 2월에서 4월까지는 3개월 평균 수익의 80%를 7,500파운드 한도로 일시지원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총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는 평균 수익의 80%까지(7,500파운드 한도), 30% 이하로 감소한 자영업자는 30%까지(2,850파운드 한도) 지원
- 5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비필수 상점들은 최대 6,000파운드까지, 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은 최대 18,000파운드까지 회생보조금(Restart grants)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소매점, 서비스업종 및 레저업종에 대한 사업용 재산세(Business rates) 면제를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2022년 3월까지는 66% 감면제도를 시행
- 회생 대출제도(Recovery Loan Scheme)를 모든 사업체(기존 대출제도 수혜자 포함)를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개시하며, £25,000 ~100,000 사이의 대출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보증을 실시
- 부가가치세(VAT) 감면제도(기존 20%에서 5%로 감면)를 2021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2022년 3월까지는 12.5%를 적용함. 또한, 2021년 6월 말까지 50만 파운드 이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Stamp duty land tax) 면제를 계속 시행하되, 7월부터 9월까지는 면제 대상을 25만 파운드 이하로 조정하고, 이후 12만 5천 파운드 이하로 면제 대상을 환원
- 일반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주당 £20 인상하는 지원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하고, 근로장려금(Working tax credit) 수혜대상자에게 £500을 1회 지원하며, 2021년 7월 말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통합급여 감액 소득 기준 적용 중단을 연장
-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배포를 위하여 17억 파운드를 배정

(2)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 이번 2021-22 세제개편안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면서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11년 연속 유류세를 동결하고, 주세 또한 동결하고, 세수확보와 국제적인 기업환경 조성 간 균형을 위하여 법인세율은 2023-24 회계연도부터 영업이익 연 25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 19%에서 25%로 인상함(임종수, 2021)

- 소득세 면세기준(연 12,570파운드), 상속세 면세기준, 연금소득 면세기준, 자본이득세 면제액 기준 등은 2026년까지 동결
- 국제 징수 강화를 위한 자원 및 기술 투자(향후 2년간 약 10억 파운드)를 통해 향후 3년간 22억 파운드의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복지 지출 점감을 통해 3년간 약 10억 파운드를 절감할 계획

(3) 기타 주요 지출 및 투자 계획

- 영국은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 창출, 지역경제 및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제도(Super deduction)를 도입하여 향후 2년간 시설 및 설비 투자액의 130%를 과세 대상 수입에서 공제하고, 1억 2,6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약 4만 명의 16~24세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임종수, 2021)
- 투자 유지를 위한 8곳의 자유무역항(Freeports)을 조성하여 이르면 2021년 말부터 운영을 개시
- 3억 7,500만 파운드 규모의 미래 펀드를 조성하여 생명공학기업, 친환경 기술기업 등을 지원
-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의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발표
- 주요 정책 결정으로 일자리 및 생계 보호 정책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존 지원 연장(고용유지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특정 부문 조세 감면 등) 및 신규 지원 도입(회복 대출제도, 신규 기업 보조금 등),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추가 투자함(윤성주 외, 2021)
- 공공재정 강화 정책으로, 법인세율 인상(2023년 4월),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 동결(2022-23년~2025-26년) 등 추진하고,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정책으로, 신규 투자 공제제도, 인프라 은행 등 민간 투자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와 혁신·R&D 기업 스케일 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level up)을 위한 자금, 녹색 산업 투자, 자유무역항 개설함(윤성주 외, 2021)

(4)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

- 영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운영하고 있는데, 1~4차 지원의 경우에는 2016/17~2018/19의 3회계연도 평균 이윤(trading profits)이 5만 파운드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개인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음¹⁰⁾(김준현외, 2021)

(5) 그 외 현금성 지원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영국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급여시스템인 통합급여(UC: Universal Credit)의 수급액을 일시적으로 인상 지급하였고, 영국은 2013년부터 기존의 실업 부조 성격의 구직급여, 주거급여, 아동 세액 공제, 근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합·대체하는 통합급여를 운영하고 있음(김준현외, 2021)
- 기본적인 지급 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의 총저축액이 1만 6천 파운드 이하여야 하며, 소득에 비례하여 수급액이 축소되는 구조로 운영됨(김준현외, 2021). 2020년 3월, 1년간 통합급여 월별 표준수당을 일시적으로 인상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이를 연장하였고, 최근 2021년 10월 6일부로 통합급여 수급액 일시 인상은 종료되었고, 예산책임처(OBR)는 통합급여 수급액 인상으로 인해 2020/21 회계연도 중에만 46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한 바 있음(김준현외, 2021)
- 영국 지방의회는 2020년 위기 이전 지출에 비해 7.9%의 지출이 증가했고, 세입(의회세, 사업세, 수수료, 수수료, 상업소득)은 5.1% 감소한 것으로 최

10) 3개의 회계연도의 평균 이윤에 대하여 월평균 이윤의 80%를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예를 들어, 3개 연도의 연간 이윤이 20,000 / 23,000 / 29,000파운드인 사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해당 지원기간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3개 연도의 월평균 이윤(2,000파운드)의 8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함(총 4,800파운드) 한편 최근의 5차 지원(지원 기간: 21.5~21.9.)의 경우, 지원규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음(김준현외, 2021). 2019/20회계연도의 순매출(turnover 또는 net sales figure)에 대비하여 2020/21 회계연도의 순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는 2019/20회계연도의 3개월분 평균 이윤(profit)의 80%(7,500파운드 한도)를, 30% 이하로 감소한 자영업자는 30%(2,850파운드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021년 8월 15일 현재 약 18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1차부터 5차까지의 소득지원제도의 지원금 지급 총액은 271억 파운드 수준임(김준현외, 2021)

근 분석됐음. 지출 측면에서는, 지방의회가 주택 및 무주택에 대해 15%, 성인 사회보육에 대해 12%의 지출 증가가 있었음. 런던과 대도시들은 경기 침체로 특히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징수율은 같은 기간 1.3% 하락했으며, 노스웨스트 지역은 0.2% 하락했음

- 영국에서 보건 지출, 지방정부 지원 및 대중교통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지원 자금으로 2020년에 190억 GBP(파운드 스텔링)의 자금 규모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97억 GBP, 웨일스 정부의 58억 5,000만 GBP, 북아일랜드 정부의 33억 GBP의 추가자금이 할당됨. 2021-22년에 추가로 24억 GBP가 지원됨 (스코틀랜드 정부 12억 GBP, 웨일스 정부 7억 4000만 GBP, 북아일랜드 행정부 4억 1000만 GBP, 그리고 2021년 Barnett 공식 외부 자금 14억 GBP)

2) 통화금융정책

- 통화금융정책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은행 금리를 65bp 인하하여 0.1%로 인하
 - 중앙은행의 영국 국채 및 비금융 회사채 보유량을 4,500억 파운드로 확대
 -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새로운 기간 자금조달 계획을 도입
 - HM 재무부와 BoE는 필요한 경우 정부에 단기 추가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BoE에서 정부의 당좌 대월 계정 사용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
 - 공동 HM 재무-영란은행(Bank of England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및 3개의 정부 대출 보증 제도(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Scheme) 출범하고, 2021년 4월 6일부터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총 3,520억 파운드의 유동성 및 대출 보증(GDP의 19.5%)을 제공
 - 캐나다, 일본, 유로 지역, 미국, 스위스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미 달러 유동성 스왑 라인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더욱 강화
 - 영국의 경기 대응 자본 완충 장치(CCyB) 비율을 0%로 2020년 12월까지 2%로 낮추고 최소 12개월 동안 0으로 유지한다는 지침을 제공
- 이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 양적완화 조치 및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인하 등 금융안정 조치 발표함(금융감독원, 2020)

- 정책금리 인하 정책으로 3월 중 두 번에 걸쳐 정책금리*를 0.75%에서 0.1%(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로 65bp 인하
- * (2016.8월) 0.25% → (2017.11월) 0.50% →(2018.8월) 0.75% → (2020.3.11.) 0.25% →(2020.3.19.) 0.10%
- 양적완화 확대 정책으로 영국 국채 및 회사채 매입 등 양적완화 규모를 4,450억 파운드에서 6,450억 원 파운드로 증액(+ £ 2,000억)
-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완화 정책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Rate)을 2022년 3월까지 현행 1%에서 0%로 완화
- 미 달러화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함

3) 예산

- 영국 회계연도 2021-22년은 2021.4.1.~2022.3.31.로, 2021.3.3.에 2021 예산안(Budget 2021) 발표하였고, 영국 재정정책은 전망 기간(FY2020-21 ~ FY2025-26) 동안 부양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되, 경제가 회복되면 법인세율 인상(2023년 4월 19%→25%) 등을 통해 차입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축소(기획재정부, 2021 & 윤성주 외, 2021)
- 2021 예산안은 ①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 공공재정 강화, ③ 투자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둠(기획재정부, 2021 & 윤성주 외, 2021)
 -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연장하고,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가 투자
 -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면 정부는 공공재정 복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채무 수준을 통제
 -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혁신 등을 위한 기회를 확산시켜(신규투자 공제, 민간투자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자본과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 영국 정부는 GDP 성장률을 2021년 4%, 2022년 7.3%로 전망하는 등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 재개 및 긴급 재정 지원 종료에 따라

FY2021-22의 GDP 대비 공공 부문 순 차입은 전년(16.9%)보다 하락한 10.3%에 달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경상예산 적자는 중기 전망 기간 동안 하락해 FY2025-26에 거의 균형을 이루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23-24에 109.7%까지 증가한 이후 재정 복원 조치에 힘입어 감소할 전망
- 영국의 2021년 예산안에서는 일자리·생계보호, 공공재정 강화, 투자주도 경제회복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강화, 중기 조세수입 강화, 민간투자 및 녹색산업 투자 등과 같은 주요 재정정책을 제시

- 일자리 및 생계 보호 정책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존 지원(고용유지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특정 부문 조세 감면 등)을 연장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회복 대출제도와 신규 보조금(Restart Grant)을 도입하는 한편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추가 투자함(기획재정부, 2021)
- 고용유지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조세 감면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연장, 법인세율 인상(2023년 4월)과 함께 투자주도의 경제 회복 정책으로, 신규투자 공제제도 도입, 인프라 은행 등 민간 투자 지원, 혁신·R&D 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윤성주 외, 2021)
- 공공재정 강화 정책으로, 법인세율 인상(19%→25%(2023년 4월)),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 기준금액 동결(2022-23년~2025-26년), 조세 회피 대응 등을 추진함(기획재정부, 2021)
- 요약하면, 2021 예산안에서 ①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 공공 재정 강화 ③ 투자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둔 650억 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제시함¹¹⁾(윤성주 외, 2021)

11) 첫째,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정책으로, 경제 재개계획을 반영해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연장하고, 팬데믹 기간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백신 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투자함(윤성주 외, 2021). 둘째, 공공재정 강화 정책으로,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 일자리, 국민의 생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경제 회복이 견고하게(durably) 진행되면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가 필요함(윤성주 외, 2021). 셋째, 투자주도의 경제 회복 정책으로,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와 기회를 확산시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역량·자본·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윤성주 외, 2021)

3. 독일

1) 재정정책

- 독일연방을 이끄는 연립정부는 2020년 3월 8일 124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하였고, 이 경기부양책은 2021~24년 동안 연평균 31억 유로씩 집행될 예정으로, 피해기업들을 위한 무한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함(정지현 외, 2020:5)
- COVID-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3개의 추가 예산을 채택했음(2021년 3월 600억으로 GDP의 1.7%)
 - 의료장비, 병원 용량 및 R&D(백신)에 대한 지출
 - 일자리와 근로자의 수입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 저소득 부모를 위한 교육 혜택 확대, 자영업자를 위한 기본 소득지원
 - 소기업 소유자 및 자영업자에게 500억 유로의 보조금 연말까지 무이자 세금 유예 및 창업을 위한 20억 유로의 벤처 캐피탈 자금지원
 - 실업보험 및 육아 휴직 혜택 기간의 일시적 연장. 6월 경기부양책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면, 가족 소득지원, 피해가 심한 중소기업 보조금,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수출업자 및 수출 금융 은행에 대한 신용 보증 확대, 녹색 에너지 및 디지털화에 대한 보조금/투자로 구성되었고, 정부는 지난 8월 단기 근로 수당 상한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생계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의 거주 보장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된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 해지가 유예되며,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도 연체로 인해 즉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음(강구상 외, 2020)
- 고용지원 정책으로, 단축 조업(Kurzarbeit) 지원금의 수령조건 완화로, 경기 영향에 따른 주문 감소로 10% 이상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경우 12개월까지 단축 조업의 실시가 가능하며, 임시직/파견직 고용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강구상 외, 2020)

- 의료지원 정책으로, 연방정부는 35억 유로 규모로 보호장비 구매, 백신 및 치료 개발을 지원하며, 550억 유로 규모로 팬데믹에 대응함(강구상 외, 2020).
-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3월과 6월에 채택한 정책 중 일부를 연말까지 확대 실시함(장영욱, 2020:12)
 - 2020년 8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단기 근로 보조금(일명 ‘Kurzarbeit’) 최대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 무이자 납세 연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500억 유로의 지원금을 연말까지 시행
 - 코로나19 2차 유행에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 보전(소득의 75%까지), 공공 대출 보증, 기초소득 제공을 포함하는 추가 재정정책 도입
-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사회·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함(윤성주 외, 2021)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20년 713억 유로, 2021년 552억 유로, 향후 연간 480억 유로 규모로 사회 인프라 확충, 기후 친화적 경제 재구조화, 디지털화 등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
 - 2020년 사회지출 분야에 2,554억 유로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1년에도 약 2,110억 유로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회 보장에 중점
- 독일은 코로나19 지원 패키지로 인해 국가부채율이 2020년 말에 GDP의 약 72%까지 올랐으나 ‘국가채무제한규정(Schuldenbremse)’에 따라 2021년 신규차입을 2022년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며 2024년에는 약 50억 유로까지 조절할 계획(윤성주 외, 2021:60-65).
-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투자로 경기 부양을 하였고, 기후 친화적인 경제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국가 수소 전략, 고속 디지털 철도 프로그램, 에너지·기후 보호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윤성주 외, 2021)
 - 기후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로 국가 수소 전략에 2024년까지 6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경제 및 미래 패키지로 기후 친화적인 철도 운행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고속 디지털 철도 프로그램에 2020년 1억 유로, 2021년 4억 유로를 지출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차량 제조 및 공급업체 연구개발에 2024년까지 추가로 15억 유로를 지원
- 미래지향적 투자를 위해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양·조선·항만 분야 등 혁신 분야에 투자를 지속할 계획(윤성주 외, 2021)
 - 인공지능 확장 축진을 위해 매년 4억 유로를 투자
 - 경제 및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한 양자 기술에 추가 20억 유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동통신(5G, 6G) 기술에 총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해양 조선 및 항공 부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연방정부 경제 및 미래 패키지에 약 20억 유로를 투자
- 독일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일회성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지원금(Soforthilfe)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극복지원 조치(Überbrückungshilfe)가 있음. 또한 기존에 지급되었던 양육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음(김준헌외, 2021)
 - 첫째로, 긴급지원금은 2020년 3월에 실시된 피해구제 제도로써 임시휴업 등에 따른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소화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신속히 일괄 지급한 것이 특징으로, 약 220만 건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금 지급이 사업 시행 후 2개월 내 완료되었음(김준헌외, 2021)
 - 둘째로, 극복지원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Umsatz)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 임차료 등을 비롯한 고정 운영비 일부를 지원(Fixkostenerstattung)하는 제도로써, 초기의 긴급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지원조건 및 증빙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임(김준헌외, 2021)
 - 셋째로, 독일의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외의 일반 국민에 대한 주요 지원으로는 양육수당의 특별지원금(Kinderbonus) 지급이 대

표적인데, 독일의 주요 복지 수당 중 하나인 양육수당은 세대 수입과 관계없이 대상 아동을 둔 부모, 양부모, 부양가정 등의 자녀부양자에게 아동 1명당 월 219유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아동 양육에 대한 피해 지원으로 2020년(9월과 12월, 총 2회)에는 아동 1인당 300유로, 2021년에는 150유로의 일회성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양육수당의 특별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2020년 기준 약 43억 유로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졌음(김준현외, 2021)

- 독일 재무부 코로나 관련 문화공연 업계 지원정책¹²⁾으로 독일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문화 행사의 재개 및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기금을 통한 지원 계획을 추진함¹³⁾(윤성주 외, 2021:37)
- 정부는 새로 신설된 경제 안정화 기금(WSF)과 공공 개발은행 KfW 를 통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 신용 보험사, 비영리 기관에 대한 공공 보증의 이용 가능한 규모와 접근을 확대하고 있음. 일부는 최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규모는 최소 7,570억 유로(GDP의 24%) 증가하였고. WSF와 KfW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공모주를 투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공함
- 연방정부의 재정 패키지 외에도 많은 지방 정부(주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직접 지원으로 1,410억 유로와 주 차원의 대출 보증으로 약 700억 유로에 달하는 자체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함

12) 소규모 문화 행사를 위한 수익성 지원 : 2021.7월 최대 500명, 2021.8월 최대 2,000명의 참가자를 위해 계획된 행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 수가 이상 감소한 경우 주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며, 행사 당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100,000유로로 제한하고, 대규모 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은 2021.9월부터 2,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대규모 행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계획된 행사가 취소, 부분 취소, 참가자 수 감소, 연기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함(윤성주 외, 2021:37)

13) 독일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20억 유로에 달하는 NEUSTART KULTUR 프로그램을 통해 폐쇄 기간 동안 문화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보장해 왔으며, Überbrückungshilfe III를 통해서도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특별기금은 재무부 및 문화-미디어 연방정부대표의 공동책임 하에 운영되며, 최대 25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배정될 예정이고, 기금의 핵심요소는 ①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따라 관객이 감소한 소규모 행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②대규모 문화 행사에 대한 취소 등에 대한 보호 정책임(윤성주 외, 2021:37)

2) 통화금융정책

- 기업자금 공급 정책으로, 연방정부는 독일재건은행(KfW)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든 규모의 기업형태를 포함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단기적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강구상 외, 2020).
 - 긴급 지원(Soforthilfe): “마이크로 기업, 1인 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임차료 및 리스 비용을 위한 500억 유로 규모 지원”
 - KfW 특별프로그램 2020: “구매(투자 포함) 및 운전자금(자원 운용 포함) 용도로 5년 이하로 운영된 신생기업에는 ‘ERP 스타트업대출’, 5년 이상 운영 기업에는 ‘KfW 기업대출’ 제공”
 - KfW 긴급대출 2020: “10인 이상 중소기업이 KfW 혹은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긴급대출”
 - “코로나 19위기 기간 동안 보증은행 등을 활용하여 250만 유로까지 기업 보증” 및 연방정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주에 있는 기업들에도 2,000만 유로 이상의 ‘대형 보증’ 실시
 -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선납 조정, 기업 신청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조세 이연, 납기일을 초과한 소득세/법인세/매출세에 대한 연말까지의 세금 유예” 등을 포함
- 3월 18일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말까지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정책 시행을 발표하고, 당국은 유럽중앙은행(ECB)가 발행한 모든 규제 및 운영 완화를 국가 감독 하에 독일 은행으로 확대하였고, 은행에 대한 경기 대응 자본 완충 장치를 0.25%에서 0으로 해제하고,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공공 개발은행 KfW를 통해 기업에 단기 현금 유동성 제공을 위한 재융자 정책을 추진함(강구상 외, 2020)
 - COVID-19 위기로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에 대해 3월 15일 이전에 설정된 소비자 대출에 대한 3개월 지불 유예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 부여

- KfW 보증에 따라 발행된 대출은 대출 기관의 자체 자금 요구 사항, 레버리지 비율 및 큰 노출 한도 계산에서 면제
- 2020년 3월, 의회는 부채가 너무 많거나 유동성이 낮은 기업의 지급불능 신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한 정지 기한은 2020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
- 국가 감독하에 있는 독일 은행은 2020년 10월까지 배당금을 분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고, 2020년 12월부터 해당 ECB 권고에 따라 독일 은행은 배당금 지급, 자사주매입, 보너스 지급이 제한됨. 2021년 2월 26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는 경기 대응 자본 완충 장치의 출시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함
- 지방 사업세와 지방 소득세의 현저한 감소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긴급 이전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완화되었는데,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2020년에 공공재정에 대한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했고, 2021년 2월 발표된 잠정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180억 유로(2019년 166억 유로 흑자 대비)와 13억 유로(2019년 56억 유로 흑자 대비)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일반 정부 부문은 1396억 유로(2019년 46억 유로 흑자 대비)적자를 기록했음
- 국내총생산에서, 주 정부 부문은 2013년 이후, 지방정부 부문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음. 적자에 대응하여, 독일에서 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채무 브레이크”를 중단하여 독일의 16개주(렌더: Länder)가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를 낼 수 있게 했음. 사전 승인된 순 자금지원 수당을 사용하여, 렌더(Länder)는 2020년 예산 적자를 부분적으로 메울 수 있었고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수당의 잔여 자금을 사용하여 전염병 관련 비용과 수익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음.
- 연방정부는 감소하는 수입을 보상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함. 지역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2020년 9월에 COVID-19 위기 동안 도시와 지자체를 지원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패키지를 결정함.

- 특히 이 지원 패키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0년 지방세 손실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렌더(Länder)가 부담함.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 복지 지출에서 연방 비율을 증가시키며, 유치원, 병원, 대중교통, 디지털화 및 지역 보건 서비스에 추가자본 보조금을 제공함.
- 이 연방 지원은 렌더(Länder)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지원 외에 이루어지고, 특히, 렌더(Länder)는 균형 예산 규칙과 삭감 조치 및 지출 동결에 대한 의무를 중단함으로써 지자체에 적용되는 재정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단기 신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
- 독일은 2020년 6월에 시작된 종합 경기부양책 외에도 독일 연방정부는 회복계획 초안을 2021년 1월에 제시했음. 복구 계획의 초점은 기후 변화와 디지털 변화에 대처하는 것으로, 기후 친화적인 대책은 재생 가능한 수소를 이용한 탄소 제거 및 기후 친화적인 건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는데, 디지털화 대책은 민간 부문의 신속한 디지털화와 국가 디지털 교육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 독일에서는 몇몇 연방 주(바바리아,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안할트)가 인프라 투자 지원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발표했음. 또한, 많은 렌더(Länder)는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하여 낮은 세금 수입과 높은 경기 부양 지출로 타격을 받는 투자를 위해 지방재정에 추가 지원을 제공함. 또한 일부 렌더, 특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과 헤센에서는 지방 자치체에 제공되는 주 기금이 교육, 지속 가능한 경제, 기후 보호와 같은 특정 정책 목표와 연계됨

3) 예산

- 독일은 2021 안정화 프로그램 및 2021년 추경 예산안을 제시하였는데, 독일 FY2021 회계연도는 2021.1.1.~2021.12.31.로, 최근 2021년 안정화 프로그램채택(2021.4.21.) 및 2021년 추경 예산안(604억 유로 규모) 확정·발표함(2021.4.23.)

- 독일 정부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0.5%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채무 제한법(Schuldenregel) 규정 재적용으로 신규차입 규모를 줄어나갈 계획임¹⁴⁾(기획재정부, 2021)
- 독일의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은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독일경제 재건을 목표로 ① 미래를 위한 투자와 ② 사회통합강화를 중심으로 편성함(기획재정부, 2021)
 -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방 예산에 역사상 최고규모의 투자지출을 배정 하였으며, 2021년 619억 유로, 2022~2025기간 동안 연간 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
 - 사회통합강화 정책으로 코로나 위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직업·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가족정책, 교육, 사회보장, 일자리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들을 시행
- 경제가 2021년 3.0%, 2022년 2.6% 성장하고, 2021년에 GDP 대비 재정수지는 △9%까지 하락, 국가채무는 7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2023-2025 기간 평균 성장률은 1.2%로 떨어지고, 재정적자는 2022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 수지균형을 달성할 전망임(기획재정부, 2021)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강화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지출 예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함(기획재정부, 2021)
 -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로의 복귀를 위해 미래 산업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간 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
 - 기후친화적 경제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국가수소전략, 고속디지털 철도프로그램, 에너지·기후보호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하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양·조선·항만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14) 채무 제한법으로 “독일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엄격한 재정 및 부채 관련 규율을 도입” 하였고, 이 규율은 차입 없는 재정균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음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를 GDP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도록 설정)(기획재정부, 2021)

지속할 계획

- 팬데믹 피해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지속하고 교육·일자리·가족 지원(자녀수당, 한부모가족 세금경감,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보장 기여금 40% 비율 유지 등 사회결속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계획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1)

4. 프랑스

1) 재정정책

- 생계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10인 미만 소기업·자영업자·프리랜서(연소득 100만 유로 미만 및 과세소득 6만 유로 미만)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월 1,500유로 지급하고, 최소 1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2,000유로 지원하고, 소기업에 대해 세금, 공과금(수도료, 전기료 등) 등의 비용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고, 고용지원 정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에 대해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함(강구상 외, 2020:18)
- 당국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4개의 수정 예산법을 도입하여 위기 해결에 투입된 재정 범위를 약 1,800억 유로(GDP의 약 8%)로 늘렸고, 은행 대출 및 신용 재보험 계획에 대한 3,150억 유로를 포함하여 3,275억 유로(GDP의 15%에 근접)의 주요 재정 지원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패키지 추진
 - 기업에 대한 사회 보장 및 세금납부 연기 및 세금 공제
 - 단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지원
 - 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노동자와 저소득 가정 지원
 -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공과금 지급 연기
 - 사회 보장 기여금이 면제되는 예외적 보너스 및 상여금 수여 촉진
 - 봉쇄와 폐쇄가 끝날 때까지 만료되는 실업수당을 연장
 - 친환경 차량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자동차 및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녹색 투자 지원 포함

- 프랑스 정부는 9월 3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키지(Plan de Relance)를 발표하였음(장영욱, 2020:12)
 - “경제의 생태적 변혁,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지역적 화합 지원을 포함한 정책” (2년간 1,000억 유로)
 - “봉쇄조치 재도입에 따른 제4차 예산법 개정안에서 기업과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발표” (GDP의 약 0.9%)
 - “올 초 시행된 지원 조치는 6월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하고 시간제한제도(the reduced-hour scheme) 및 연대 기금을 통한 지원을 2020년 말까지 확대 시행”
- 2021년 예산에는 긴급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자금이 포함되었으며, 이 자금은 계속되는 봉쇄 조치(현재 논의 중인 개정법의 조치를 포함하여 GDP의 약 3%) 중에 확장되었음
- 2021년 예산에는 프랑스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9월에 발표된 재정 패키지(Plan de Relance)의 핵심요소도 포함되었고, 복구 계획에는 2년에 걸쳐 약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경제의 회복 지원,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통합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계획의 약 400억은 EU 회복 기금의 보조금으로 충당됨
- 코로나 19위기 종식까지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함(윤성주 외, 2021:40).
 -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 시켜 나갈 계획
 - 문화 관련 부문의 영업재개에 따라 해당 부문에 총 1억 5,000만 유로 지원
 -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 추진 지출에 98억 유로 추가 편성(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에 40억 유로, 코로나 19 이후 기업 지원을 위한 연대 기금에 36억 유로, 부분 실업 지원에 22억 유로)
 - 프랑스 경제 활성화 지출에 1억 유로 추가 편성(프랑스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42억 유로,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에 6억 유로)

2) 통화금융정책

- 3,000억 유로 규모의 기업 은행 대출 보증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1월 이후 창업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5,00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국내 매출액 15억 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보증과 5,000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국내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대출 보증함(강구상 외, 2020:18)
- 3월 18일 유럽중앙은행(ECB:European Central Bank)은 2020년 말까지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정책 시행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권은 물론 민간부문의 채권까지 매입하고, ECB는 필요시 특정 회원국이 발행하는 전체 국채 발행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개정할 것임을 강조함(강구상 외, 2020:18)
- 2020년 3월 12일과 18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강력한 통화정책과 감독방안을 발표했고, 경제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음¹⁵⁾(이태훈, 2020)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빠르고 강력하게 재정을 지원하였고,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9년 3.1%에서 2020년 9.2%로 급격히 악화됐고, 이는 GDP가 -8.2%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 및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원 조치를 추진함(윤성주 외, 2021)
- 2020년 하반기에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20년의 GDP 대비 재정

15) 첫 번째, 즉각적인 재정팽창(immediate fiscal impulse)은 의료 보조, 고용 유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지원, 공공투자 등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정부 지출은 물론 정부의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특정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완화하는 조치를 의미함(이태훈, 2020). 두 번째,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의무는 유효하며 세금 및 사회보장비용은 추후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임(이태훈, 2020). 세 번째, 다른 유동성 공급책으로는 수출 보증장(exports guarantees), 유동성 보조, 국내 개발은행을 통한 신용한도 증가 등이 있음(이태훈, 2020)

수지는 2020년 4차 수정예산법안에서 전망한 -11.3%보다 조금 높게 전망됨(윤성주 외, 2021)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4월 14일 2021~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1-2027)을 발표하고,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향후 4년의 재정계획을 담은 안정화 프로그램을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 제출해야 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경제 및 재정 전망을 업데이트하고, 회복 및 경제 성장 지원정책의 영향을 다룸(윤성주 외, 2021)
- 코로나 19에 대응해 2020년 3월 1차 수정예산법안을 편성한 이후로 긴급 지원조치를 확대 편성했고, 2021년 예산법안은 1천억 유로 규모의 복구계획을 포함(윤성주 외, 2021).
 - “1천억 유로 규모의 프랑스 활성화 계획(Plan de relance)은 프랑스 경제의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모델을 위해 투자”
 -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을 보호 및 사회적 통합을 지원”
- 2021년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동 수준도 개선되어 GDP가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에도, 재정지출의 증가로 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9.0%로 악화될 전망이다(윤성주 외, 2021).
-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다년간의 재정 경로는 경제 활동의 회복을 보장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확인함(윤성주 외, 2021)
 - “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지면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동시에 공공지출을 통제하는 노력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
 - “안정화 프로그램의 공공채무 경로에 따르면 2026년부터 GDP 대비 공공채무의 실제적인 감축”
 - “2027년부터는 재정수지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미만으로 감소”

-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해 효율적인 재정지출”
 - “위기 이후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은 경기 회복 능력과 잠재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집중”
 -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
- 중기 재정지출은 성장, 포용, 생태 및 디지털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출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료 부문 전문가에 대한 보수개선, 보건 및 의료 관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투자 확대, 세금 인하와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 및 복구조치들을 지속함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은 필요하지 않고, 마크롱 정부 집권 초기부터 시작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생산세 감면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총조세부담률 (prélèvements obligatoires)은 2021년 43.5%에서 2027년 43.7%로 해당 기간 동안 0.2%p만 상승할 전망으로,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함 (윤성주 외, 2021)
 - 큰 지방 자치 단체들인 78개 대도시에서 평균 1%에서 9% 사이의 실질 운영 수입 감소와 20%에서 30% 사이의 자체 자금 조달 능력 상실과 함께 관광과 산악지역 자치단체(스키장)도 특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관광객 세금, 카지노, 경마, 스키 리프트, 카지노 세금 및 기타 계절적 활동과 같은 특정 수입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의 4,000개 관광 자치단체가 “위험”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됨
 - 프랑스의 경우 2020년 5월에 발표된 45억 유로 비상계획은 관광 도시에 대한 지원과 증가된 사회지출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지방 투자 지원 보조금(Dotation de Soutien à l'Investment Local), 임대료 취소 보상 및 대중교통 지원, 생산세 인하(개발토지에 대한 재산세 포함)정책들을 추진함
 - 정부는 지역 투자 기금의 지원과 지역 기금 개발을 장려하고, 일부 지역은 지방 공공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자치 당국에 지역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Pays de la Loire에서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182억 2천 2백만 유로에서 2021년 3천15억1천만 유로로 늘렸고, 주-지역 계획 계약(CPER)과 지방 자치 단체(ECI 및 그룹)를 위한 상호 관계 및 전환 에콜로지크(CRTE)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 2020), 2020). CRTE는 지역 당국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공식화함

- 프랑스에서는 긴급계획과 복구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지방투자지원금을 6억 유로에서 16억 유로로 늘려 보건, 환경전환 및 유산보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특히 강조할 예정이고, 녹색 전환을 향한 하위 국가 투자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1월 복구 및 생태적 전환 계약(CRTE)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역 간의 새로운 계약 프레임 워크를 추진함
- 복구 계획에는 지역 개발과 응집력에 맞춘 초국가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패키지(예: 디지털 포함, 광통신망 국가 전체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 광대역 계획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투자의 혁신적 성격 외에도 위기가 종료될 때 활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단기 지원을 제공할 것임
- 2020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회복 계획을 처리할 시장들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했고, 본 가이드는 각 투자 범주에 적절한 조치, 사용 가능한 자금 및 실제 세부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회복계획의 조치를 시장이 읽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또한 프랑스 관계(France Relance)라는 이름의 전용 웹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이트는 복구 계획의 일부로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합한 것임
- 2021년 재정법은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리노베이션, 소프트 이동성 솔루션 및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6억 유로에 달하는 지역 투자 보조금을 통해 위기 이전 투자 결정을 지원하고, 이 보조금은 지역 의회와 협력하여 지방 자치체에 의해 관리될 것임

3) 예산

- 프랑스의 FY2021 회계연도는 2021.1.1.~2021.12.31.이며, 최근 FY2021 예산 법안(2020.9.28.) 및 2021~2027 안정화 프로그램(2021.4.14.)을 발표함(기획재정부, 2021)
- 프랑스 정부가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다년간의 재정 경로는 경제 활동 회복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임¹⁶⁾(기획재정부, 2021)
- 프랑스의 예산법안 및 안정화 계획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과 미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① 프랑스 경제의 저탄소 체제 전환 지원, ②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③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함(기획재정부, 2021)
-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21년 5%, 2022년 4%를 기록하여 2022년에 2019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강력한 지원 조치의 지속과 보건부문 지출 확대에 의해 △9%를 기록할 전망이고, 2023년과 2024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3%, 1.6%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4년 이후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3~2027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공공지출 통제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를 점차 안정시킬 전망임(기획재정부, 2021)
- 요약하면, 프랑스의 예산법안은 ① 생태학적 전환, ② 경쟁력 강화, ③ 사회적 포용성 강화의 3대 방향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음(기획재정부, 2021)
 - 생태학적 전환으로,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혁신 가속화,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농업부문의 친환경 전환, 재생가능한 저탄소·수소 부문의 개발,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강화 등에 투자
 - 경쟁력 강화로,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 인하, 기업 활동 재개 지원,

16) 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지면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공공지출을 통제하는 노력을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고, 중기 재정지출은 성장, 포용, 생태 및 디지털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출 효율성을 확보함(기획재정부, 2021)

프랑스 경제의 탄력성 지원

- 사회적 포용성 강화로, 부분실업 제도(chômage partiel) 지속, 청년 고용 지원 정책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5. 중화인민공화국

1) 재정정책

-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금융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정지현 외, 2020:6)
 -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반지출을 축소하고 방역자금의 투입을 확대” 할 방침
 - 중국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은 세금 감면 및 납부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보험료(의료보험 포함) 부담금에 대해 약 6,600억 위안을 지원” 할 방침
 -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의 회복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의 합리적인 유동성 구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방역 중점지역·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
 -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이자의 하향조정,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의 확대 등을 추진
- 직접 소득지원 정책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충칭시 충현(忠縣)은 2만 4,000여 명의 저소득층(고아, 독거노인 등)에게 2,932.4만 위안의 생활보장소득을 지급하고, 산둥성 칭다오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7,446만 위안 지원, 이 밖에 쌀, 밀가루, 야채, 계란 등의 필수 식료품 등을 지원함(정지현 외, 2020:6)
- 4조 9000억 위안(GDP의 4.7%)으로 추정되는 재량 재정 조치가 발표되었으며 그 중 4조 2000억 위안이 2020년에 시행된 것으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지출 증가

- 의료 장비 생산
 - 실업 보험의 신속한 지급 및 이주 노동자에 대한 확대
 - 세금 감면 및 사회 보장 기여금 면제
 - 추가 공공 투자. 예산 지원에 따라 자동 안전장치가 추가로 증가
 - 예산 외 지원에는 도로, 항만, 전기와 같은 품목 사용에 대한 4,000억 위안(GDP의 0.4%)의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과 9,000억 위안(GDP의 0.9%) 이상의 수수료 및 관세 인하가 포함
- 2020년에는 토지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중앙정부는 2021년 2월에 올해 지방 특별채의 규모가 2020년보다 약간 낮은 3조 6500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은 3.2% 내외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코로나 19 특별 국채는 발행하지 않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보다는 재정 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정책을 추진함
- 2021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규모를 3조 6,500억위안으로 축소할 것을 발표하고, 2019년 2조 1,500억위안, 2020년 3조 7,500억위안 → 2021년 3조 6,500억위안으로, 발행된 특별채권의 규모가 올해에도 의도한 정책효과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축소함(윤성주 외, 2021)
-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신규증가 규모를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적합하다는 입장이고, 중앙정부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며 전국일반공공예산 지출은 25조 120억위안(전년 대비 1.9% 증가)으로 중앙일반 공공예산 본급지출 3조 5,015억위안(전년 대비 0.2% 감소)이며, 지방일반공공예산 지출 21조 4,605억위안(전년 대비 2.0% 증가)임(윤성주 외, 2021)
- 중국 정부는 2021년 중점 재정지출 내역으로 ① 혁신발전 및 산업도약 촉진 ② 내수확대전략 지원 ③ 지방균형발전 및 도시화 지원 ④ 농촌부흥 전략 실행 ⑤ 오염방지 및 생태계보호 지원 ⑥ 민생보장 강화 ⑦ 국방,

외교, 정치사법 분야 지원을 제시함(윤성주 외, 2021)

-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와 함께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에서, 2021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양적 성장 목표를 축소하고 “혁신 능력 제고, 공급 측 구조개혁, 수요 측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양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재정 리스크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거시경제 성장을 이룰 계획함
- 중국은 코로나 19위기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정상화를 목표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되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는 내실 강화, 고용, 환경, 부채관리 등 다방면을 아우르는 체질 개선에 주력함(윤성주 외, 2021: 60-65)
- 2021년 재정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지출강도 유지, 감세장비(減稅降費,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의 최적화, 적절한 수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설정,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축소,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중단, 정부예산 긴축기조(緊日子) 운용을 제시함(윤성주 외, 2021)
-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현대 산업 시스템의 발전, 디지털 경제 육성에 의한 전면적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제시함(윤성주 외, 2021)
 -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7대 분야로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 회로, 뇌 과학 연구,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 심우주·심부 지하·심해·극지 탐사” 등이 포함
 - 제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8대 분야로 “첨단 신소재, 중요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와 로봇 기술,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베이더우(北斗) 산업화 응용, 신에너지 자동차 및 ICV(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자동차, 첨단 의료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장비” 등이 포함
 - 전략적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보호, 항공우주, 해양장비” 등이 있으며, 이 분야의 부가가치 비중이 GDP의 17%를 초과할 것을 목표로 설정
 -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를

GDP 대비 10% 비중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디지털 경제 7대 중점 산업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IoT, 산업 인터넷, 블록체인, 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 디지털화 응용 관련 10대 분야로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및 수리, 스마트 교육, 스마트 의료, 스마트 레저, 스마트 사회, 스마트 홈, 스마트 정부” 등
- 2021년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을 ‘안정적인 경제성장,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으로 설정하고, 자주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과 함께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투자하고, 신형 인프라 구축으로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기초 소프트웨어, 우주 인프라 등 개발 계획 수립함(윤성주 외, 2021)

2) 통화금융정책

- 감세정책으로 기존의 임시적 감세정책의 지속 기한을 연장하거나 향상해 나갈 방침으로,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월매출 10만원안에서 15만원안으로 조정하고,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납세소득이 100만원 안이 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광대역과 전용 회선 사용요금을 평균 10% 추가 인하함(윤성주 외, 2021)
- 통화정책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고, 통화공급량(M2)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율을 명목경제성장률에 맞추어 증가시키고, 적절하고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동시에 거시레버리지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윤성주 외, 2021)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및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절감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포용금융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유예 정책 지속, 중소기업대출 보증비용을 낮추기 위한 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 정책 지속, 대형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포용대출 비율을 30% 확대하고, 실질 이자율

을 인하(윤성주 외, 2021)

- 정부는 또한 피해를 입은 가게, 기업 및 상환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에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측정된 관용을 포함하여 재정 상황의 긴축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지방 은행의 무담보 중소기업 대출 지원
 - 대형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목표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평가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장려
 - 대출 상환 지연(2021년 말까지 기한 연장)
 - 온라인 대출에 대한 대출 규모 제한 완화
 - 적격 중소기업 및 가게에 대한 기타 신용 지원 조치
 -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금융 기관의 채권 발행 지원
- 2021년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률, 고용 등 중국 실물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 공급과잉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됨(문지영 외, 2021:2)
- 경제 정상화에서 재정정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2020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전망이다(문지영 외, 2021:2)
- 중국에서 정부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지방정부에 2조 위안 규모의 자금 이전을 계속하고 있고, 이는 2020년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6%(3% 이상 처음) 이상으로 확대하여 예산적자에 1조 위안(약 1조 원)을 추가하고 지방정부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별 COVID-19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2월, 중앙 정부는 2021년에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2%로 다시 확대될 것이며, 올해는 특별한 COVID-19 채권이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중국정부는 2020년에 발행될 새로운 특별 지방 정부 채권에 대

해 3조 7500억 위안의 쿼터를 승인했고, 이러한 채권은 새로운 인프라 및 도시화 이니셔티브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S&P Global Ratings, 2020). 9월 말까지 신규 지방특채의 약 30%가 도시기반시설 사업(5G 기술망 포함)에 사용되고, 20%는 교통비, 20% 내외는 사회공공서비스에 할당됨

3) 예산

- 중국의 FY2021 회계연도는 2021.1.1.~2021.12.31.이며, 지난 3월에 2021년 예산안(25조 120억위안 규모) 및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의결됨(기획재정부, 2021)
- 중국은 2021년 예산안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축소와 코로나 19 특별국채 발행 중단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한도 축소를 통해 재정 리스크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함
- 중국의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은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강조하며, ①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와 ② 민생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혁신발전을 위한 투자 정책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혁신주도형 발전)을 목표로 전략적 기술 및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2021~2025년 기간 동안 R&D 지출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7% 이상으로 제시함(기획재정부, 2021:45-46). 민생보장 강화 정책으로, 고용우선정책을 실시하여 2021~2025년 기간 동안 1인당 가처분 소득증가율이 GDP 증가율 수준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추구하고, 고용을 통한 소득개선과 중산층 확대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 도모함 (기획재정부, 2021)
- 주요 재정정책으로 ①혁신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및 ②민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첫째, 혁신발전 정책으로, 전략과학기술 분야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품 등을 지목하였으며 전략적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항공우주산업, 녹색산업 등을 제시하고, 기업 연구개발비의 75%를 세금 공제(제조기업의 경우 100%)하는 정책 실시함(기획재정부, 2021). 둘째, 민생보장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산업보험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고용보험 보험료 반환 정책 범위를 확대, 의료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접근성 제고, 농촌진흥 및 빈곤퇴치 등 교육·보건·빈곤 퇴치 등을 강조하고 고용우선정책을 유지 및 확대함(기획재정부, 2021)

6. 일본

1) 재정정책

- 2019년 12월 경기 부양 패키지(2020년 1월 통과)와 2020년 2월 13일과 3월 10일 코로나 19 대응정책을 제안하였고, 코로나 19에 대응한 긴급대책 1·2탄(2월 13일·3월 10일 발표)에 따라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함¹⁷⁾(정지현 외, 2020:9-10)
- 일본정부는 △신용보증지원 제도 실시 △지원 금액 및 대상 업종 확대 △대출조건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함¹⁸⁾(정지현 외, 2020:9-10)
- 보조금 정책으로 사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조정지원금’을 실시하고 학교 임시 휴교에 따른 휴직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¹⁹⁾(정지현 외, 2020)

17) 2월 13일 발표한 긴급대책 제1탄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관광업 등 중소기업 대상의 저이자 대출 및 보증지원을 포함(5,000억 엔 규모)하고, 3월 10일 발표한 긴급대책 2탄에는 소규모·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대기업 대상의 공급망 재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을 추가(1조 6,000억 엔 규모로, 제1탄 대비 약 3배로 확대)함 (정지현 외, 2020:9-10)

18) 재해 등 외부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을 각각 100%, 80% 보장해주는 ‘안전망(SN: Safety Net) 보증’을 발동하고(2억 8,000만 엔 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함(정지현 외, 2020). 3월 10일 새로운 신용보증지원 제도인 ‘위기관련보증’을 추가로 발표(2억 8,000만 엔 한도)하고, 소규모 사업자·중소기업으로 대출 대상업종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특별대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환경 특별대출제도’ 등 대출지원제도를 신설함(정지현 외, 2020)

19) 2월 14일 ‘고용조정보조금’의 특례조치를 발표하여 기업의 휴업수당(중소기업 2/3, 대기업 1/2)을 지원하고, 3월 4일 ‘고용조정보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핫카이드와 같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역에서는 휴업수당을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3월 10일 발표한 긴급대책에서 초·중·고등학교 임시 휴교로 인해 보호자가 휴직하는 경우 이를 유급휴가로 간주해주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함(1일 8,330엔 한도)(정지현 외, 2020)

- 직접 소득지원 정책으로, 일본 정부는 자녀 양육 세대에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긴급경제대책에는 현재 한 자녀에 한해 월 1만~1만 5,000엔 지급하던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됨(정지현 외, 2020: 9-10)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는 총액 약 2조 엔 규모인 1인당 1만 2,000엔의 현금 지원을 실시)
- 2020년 4월 7일(4월 20일 일부 수정) 일본 정부는 117조 1000억 엔(2019년 GDP의 20.9%)의 COVID-19에 대한 긴급 경제 패키지를 채택하고, 주요내용 들은 “감염 확대 방지, 고용유지 및 사업지속 지원, 경제활동의 회복, 경제구조의 구축” 등이 포함됨
 - 감염 확산에 대한 예방 조치 개발 및 치료 역량 강화(2019년 GDP의 0.4% 지출)
 - 고용 및 기업 보호(2019년 GDP의 15.8% 지출)
 - 봉쇄 후 경제 활동 회복(2019년 GDP의 1.5% 지출)
 -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 재건(2019년 GDP의 2.8% 지출)
 - 미래에 대한 준비 강화(2019년 GDP의 0.3%).
 - 주요 조치에는 모든 개인과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 세금 납부 및 사회 보장 기여금 연기,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의 양허성 대출이 포함
 - 첫 번째 감염 확대 방지 정책으로, 5만 개 이상의 추가 코로나 대응 긴급 병상 확보, 의료용 마스크 1,500만 장 추가 배포, 온라인 · 전화 진료(원격 진료) 적극 활용을 권고하였으며, 귀국자에 대한 검사체제 강화, 집단감염의 특정 및 이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등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지성현, 2020:17)
 - 두 번째, 고용유지 · 사업지속 대책으로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률 인상, 중소 및 영세 사업자의 사업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지원, 수입이 감소한 세대(기준: 2020년 2~6월의 기간 중 세대주의 특정 달 월수입이 ①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감소하고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소득세 비과세 수준이 되는 저소득 세대 ②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 시 수입이

절반이상 감소하고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소득세 비과세 수준 3의 2배 이하가 되는 세대)에 대해 현금 지급(30만 엔), 육아수당 지급세대 대상 아동 1인당 1만 엔 초과 지급 등 각종 대책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현금급부를 ‘생활지원 임시급부금’으로 칭하고 일본 총무성에 생활지원 임시급부금 실시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지성현, 2020:17)

- 세 번째, 경제활동의 회복 대책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격심하게 타격을 입은 관광·운수업, 외식업, 문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를 환기하고, 일본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내용을 준비 중이며, 캠페인 기간 중 여행상품, 공연 표를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할인권, 쿠폰 등을 제공(지성현, 2020:17).
- 네 번째, 경제구조의 재구축을 대책으로 시행하였는데, 기업의 공급망 재구축 지원을 위해서 해외공장에서 국내공장으로 유턴하는 유턴 기업을 세제지원하고, 의약품의 일본 내 제조거점 정비를 재정 지원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대체 및 사용량 절감, 수입 제품·부품·소재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의 경우 대체 국가 등으로 생산 설비를 다양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세워 경제구조의 재설정도 추진함(지성현, 2020:17).
- 일본은 IMF 재정 자원 및 기금의 양허성 대출 시설에 대한 가장 큰 기여자일뿐만 아니라 역량 개발 활동에 있어 가장 오랜 파트너임. 2020년 4월 일본은 COVID-19와 싸우기 위해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에 보조금 기반 채무 상환을 제공하는 기금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IMF의 재난 억제 및 구호 신탁에 1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기로 약속함
- 2020년 5월 27일 일본 정부는 117조 1000억 엔의 규모로 2019년 GDP의 20.9%에 해당하는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함
- 주요한 내용은 건강 관련 지원, 기업 지원, 가게 지원, COVID-19 예비 기금의 한도 인상등이 포함

- 구체적인 조치에는 근로 보조금 확대, 공공 금융 기관의 피해 기업에 대한 후순위 대출 제공, 피해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 보조금 등이 포함
- 2020년 12월 8일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안정과 희망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을 채택하고, 73조 6000억 엔(2019년 GDP의 13.1%)에 해당하는 이 패키지는 (i) COVID-19 억제,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적 변화 및 긍정적인 경제 사이클 촉진, (iii) 안전 및 COVID-19 예비 기금의 할당과 함께 재난 관리와 관련된 구호가 포함됨. 구체적인 조치에는 기업이 디지털화 및 녹색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양허성 대출과 같은 지속적인 COVID-19 대응의 확장이 포함됨
- 스가 총리, 제3회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함(2021.06.08.) (윤성주 외, 2021:32-33)
 -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며 음식·숙박 등 특정 산업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이 요구
 - 긴급 지원책의 이용 실적을 분석하여 구직자 지원 제도와 공공 직업 훈련에 대한 긴급 지원책 이용 촉진을 위한 개선책 강구
 - 디지털·그린 등 성장 분야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육 훈련 강화를 추가하고 순환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저 임금 인상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 강화
 - 포스트 코로나에 어울리는 안심할 수 있는 사회와 강한 경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그린, 디지털,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저출산 대책 4가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속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주요 재정정책으로, 일본의 FY2021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새로운 사회 실현 및 중장기적인 성장력 강화를 목표로 감염 확산 방지, 경제구조 전환, 방재·감제 및 국토강인화·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시행·계획함(기획재정부, 2021)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대책 정책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 지원교부금(병상 및 숙박요양시설 확보 등), 검사체제 확보, 백신접종체제 등의 정비, 철저한 감염방지대책 기반 조성 및 국제 협력함(기획재정부, 2021)
-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정책으로, 디지털 개혁·그린 사회 실현, 경제구조전환·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지역·사회·고용에 의한 민간수요주도의 선순환 실현함(기획재정부, 2021)
- 방재·감재(減災), 국토 강인화·안전 확보 정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재·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대책(가칭)」 추진,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재해 복구, 노후화 대책 마련함(기획재정부, 2021)

2) 통화금융정책

- 2020년 3월 16일 일본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추가 양적완화 △ 기업금융 지원 특별 공개시장조작 △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결정함(강구상 외, 2020).
- 2020년 3월 16일 일본 은행(BoJ)은 통화 정책 회의를 소집하고 금융 시장(특히 미국 달러 자금 조달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신용 제공을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발표함. 여기에는 일본 국채(JGB) 매입 규모 및 빈도 증가를 통한 목표 유동성 제공 및 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특별 자금 공급 운영이 포함됨
- 상장지수펀드(ETF)와 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s), 상업어음과 회사채의 표적매입을 일시적으로 추가로 늘릴 예정으로, 일본은행은 특별자금조달을 통해 대출지원을 함
- 2020년 4월 27일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일본 은행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용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음. 일본은행은 일본국채(JGB)매입 지침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 일본국채

(JGB)매입을 결정했음. 또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추가매입 한도를 상향 조정해 기업어음과 회사채 보유 한도를 총액 20조엔(미화 1860억 달러)으로 올렸음

- 특별자금 조달 업무는 적격 거래상대방과 담보의 범위를 사채(가계부채 포함)까지 확대하고, 일본은행은 5월 22일 정부의 긴급 경제 대책에 따라 적격 거래상대방의 무이자 및 무담보 대출 등 대출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신규 자금 마련 방안을 도입
- 특별자금조달사업과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의 총 규모는 약 90조엔(미화 8,380억 달러)이고, 정부의 긴급 경제 조치에 따라 무이자 및 무담보 대출에 대한 자금 제공
- 정부는 일본금융공사 등 기관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했고, 정부는 지방은행 등 지방금융기관의 대출 접근성도 강화하였음
- 2020년 6월 12일 국회는 지방은행의 국고출자 신청 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6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기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지방 은행에 대한 정부 자본 투입을 촉진하여 지방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회는 지방 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에 대한 정부보증 한도를 12조 엔에서 15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음.
- 일본은 2021 회계연도에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지방세 수입은 1년의 시차가 있어 2020년에 비해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이 순환 법인세(세수의 25%를 나타냄)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반면, 도시는 더 안정적인 재산세(세수의 40%)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는 도시보다 더 심할 것임. 특히 고령화 인구에 의한 사회복지 비용 등 지출 요구는 여전히 높을 것임.
- 2021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완화정책 장기화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는 민간금융기관의 일본은행 예치금을 일본은행의 대출촉진 자금공급에 따라 카테고리 I, II, III로 구분하고, 각각 +0.2%, +0.1%,

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임(안성배 외, 2021)

- 2021년 6월 18일 일본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도입된 ‘코로나19 대응 자금 유통 지원 특별 프로그램’의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함(안성배 외, 2021)

3) 예산

- 일본 FY2021는 2021.4.1.~2022.3.31.로, 2020.12.21. 일본 재무성에서 FY2021 예산 정부안 발표하였고, 예산기조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채 발행액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1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섬(기획재정부, 2021)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세입·세출 개혁(‘국가사업 재검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 지출 원점 재검토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사업리뷰 등 세출개혁을 통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추구함(기획재정부, 2021)
- 예산 편성은 “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②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③ 방재·감재(減災), 국토 강인화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2021년도 실질GDP 성장률 4.0%, 명목GDP 성장률 4.4%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초적 재정수지는 2020년 △12.9%, 2021년 △7.2%에 달하나 중장기적으로 2029년 이후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임(기획재정부, 2021)
- 2021년 6월 18일 일본정부는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각의 결정함(김규판, 2021:2)
 - 일본정부는 2021년 5월 1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기초 재정수지를 2025년도에 흑자화하겠다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논의한 후 이번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발표
 - ‘호네부토 방침’은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

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

- 2021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 그린성장·디지털 전환·최저임금인상·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구성
- 일본 정부는 2022년 예산에서 각 부처의 재량경비와 의무경비를 절감한 금액의 3배 규모의 예산을 성장전략실행계획의 4대 신성장동력(그린, 디지털,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 대책)에 집중 분배하는 편성 방식을 2년 만에 부활시키고, 해당 방식을 도입한 일본 각 부처의 2022년도 예산요구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1조 엔에 달함(안성배 외, 2021)
- 일본정부는 신성장사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부 부처가 기존 사업을 ‘신성장’ 항목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예산증액이 세제효율화·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안성배 외, 2021)
-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8일 코로나 19 지원금 등을 포함한 21년 추경의 연내 편성을 촉구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및 ‘일본식 자본주의’ 실행을 위한 수십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제대책은 노동 분배율 향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임(안성배 외, 2021)

7. 싱가포르

1) 재정정책

- 당국은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약 920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여러 재정 지원 조치 패키지(2020년 2월 18일, 3월 26일, 4월 6일, 4월 21일, 5월 26일, 8월 17일)를 발표함
- 가구 지원에는 모든 싱가포르인(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더 높음)에 대한 현금 지급과 저소득 개인 및 실업자에 대한 추가 지급이 포함되었고, 기업·근로자 지원에는 임금보조금(2021년 3월까지 연장, 업종에 따라 지원 정도), 일자리 창출, 임대료 지원, 자금조달 강화, 자영업 및 산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됨
 - 코로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공, 관광, 건설, 교통,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 자금을 늘리고 대출 의무 및 보험료 지불로 인해 현금 흐름 문제에 직면한 기업을 돕기 위해 220억 싱가포르 달러의 대출 자본을 지원하고, 다른 경제적 회복력 조치에는 R&D 투자 지원, 국가적 건강 용품 비축량, 식량 회복력 프로그램이 포함됨
 -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인 “항공 부문에 8억7000만 싱가포르달러, 문화예술스포츠 부문에 4500만 싱가포르달러, 택시 및 개인고용차량 운전자에게 1억3300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등 총 12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을 추가 지원” 키로 했음
- 2021년 4월 1일에 발효되는 FY2021 예산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포괄적인 긴급 구호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으로, FY2020 경기 부양 패키지의 몇 가지 조치를 확장하기 위한 110억 싱가포르 달러의 COVID-19 회복 패키지가 포함됨
- 정부는 코로나 19로 부터 영향을 받는 근로자, 기업,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28일에 총 8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고, Job Support Scheme에 따른 지원 강화, 적절한 개인 및 근로자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 상업용 부동산의 적격 세입자에 대한 임대 지원이 포함됨

- 자국민 일자리를 보전하고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제조업 내 SP 비자 근로자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2022년 18%, 2023년 15%로 낮추기로 계획하였고,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찬층 장관은 향후 10년 내 제조업의 50%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 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줄이고 싱가포르인 고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이정현, 2021)
-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수출 둔화로 싱가포르의 2019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0.7%를 기록하였으며, 통상산업부 및 통화청은 2월 27일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0.5~2.5%에서 -0.5~1.5%로 하향조정함(정지현 외, 2020:11-12).
- 직접 소득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에 2020년 전체 예산안의 7.6%인 64억 싱가포르달러(약 5조 5,000억 원)가 책정되었으며, 가계 지원을 위한 16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4,000억 원)가 포함됨²⁰⁾(정지현 외, 2020:11-12)
- 싱가포르 정부는 2~4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599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약 51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가계 및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금 지원을 확대함(강구상 외, 2020:18-19).
 - 기존에 발표한 “일회성 현금지원(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300~900싱달러 지급)에 추가적으로 300싱달러를 일괄적으로 4월에 지급” 하고,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300싱달러를 추가 지원
 - “약 10만여 명의 자영업자에게 9개월 동안 매월 1,000싱달러를 지급”
 -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WIS)²⁴⁾ 대상자에게는 3,000싱달러 현금을 1회 지원, 50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100싱달러 상당의 복지카드(PAssion Card)는 현금으로 대체 지급, 21세 이상으로서 주택개발청(HDB)

20)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원,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싱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WIS) 대상자에게 연령 및 고용형태에 따라 특별 현금(100~720싱달러)을 추가 지원, 50세 이상 국민에게 100싱달러 마일리지 가 포함된 카드,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개발청(HDB)의 방 1~2개 거주자에게 100싱달러의 식료품 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임(정지현 외, 2020:11-12)

의 방 1~2개 거주자에게 300싱달러의 식료품 상품권 제공,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에게는 3개월간 매달 800싱달러의 보조금 등을 지급”

- “일자리 유지를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급여(최대 4,600싱달러)의 75%를 세 차례에 걸쳐 지원(Jobs Support Scheme)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Wage Credit Scheme)”

○ 싱가포르는 그간 디젤세,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왔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Singapore Green Plan 2030를 발표하며 더욱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과 식량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농업생산성기금을 대체할 농식품 클러스터 전환 기금을 신규 설치하고 6000만 달러를 투입함(이정현, 2021).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디젤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기로 했고, 이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차에 집중함에 따라 사용 장려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관련 이니셔티브에 300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였고, 2030년까지 공공주차장 및 사유지에 6만여 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함(이정현, 2021)

2) 통화금융정책

○ 정부는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의 약 33%를 기업 신용위험 해소방안을 위해 편성하면서 기업의 신용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강구상 외, 2020).

- 중소기업과 무역금융 대출한도를 각각 30만 싱달러 → 100만 싱달러, 500만 싱달러 → 1,000만 싱달러로 상향 조정
- 관광업 기업으로 한정했던 기존 대출대상 기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500만 싱달러로 상향 조정
- 경기부양책으로 마련된 기업 대출 프로그램의 정부 보증비율을 90%까지 상향 조정
- 기업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50% → 80%로 확대
- 통화청은 3월 30일 싱가포르달러 명목실효환율(NEER)의 정책밴드 기울기

(절상률)를 연율 0%로 설정하면서 통화완화에 나섰으며, 금융시장 안정과 달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3월 20일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2020년 재정수지는 독립 이래 최저 수준인 GDP 대비 -13.9%였으며, 2021년에는 다소 회복하여 GDP 대비 -2.2%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총수입의 회복이 기대되는 한편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확장을 계획하고 있음(허경선 외, 2021)
- 2월 14일,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신중한 위험 평가를 준수하면서 COVID-19 발생의 영향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은행 및 보험사의 발표를 환영함. 3월 31일 MAS와 금융계는 일시적인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고, 패키지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됨
 - 개인이 대출 및 보험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원
 - 은행 신용 및 보험 보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
 - 은행간 자금조달 시장이 유동성을 유지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4월 30일에 발표된 패키지는 개인에 대한 구제 범위를 광범위한 대출 약정 추진
- 2020년 4월 8일,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1억 2,500만 달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금융 부문 개발 기금(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이 자금을 지원하는 이 패키지에는 세 가지 주요 분야가 포함됨
 - 인력 교육 및 인력 비용 지원
 - 디지털화 및 운영 탄력성 강화
 - 디지털 도구에 대한 핀테크 기업의 접근을 강화
- 7월 29일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현지 법인 은행에 주당 총 배당금을 FY2019 수준의 60%로 제한하고 주

주들에게 현금 대신 스크립(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고, 8월 7일 MAS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금융 회사에 FY2020의 주당 총 배당금을 FY2019 수준의 60%로 제한할 것을 촉구함. 9월 3일, MAS는 9월 28일부터 싱가포르 달러(SGD) 및 미국 달러(USD) 자금 조달에 대한 은행 시스템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 10월 5일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와 금융계는 대출 상환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고, 주택, 상업 및 산업 자산 대출을 받은 개인 중 대출 전액 상환을 재개할 수 없는 개인은 월 할부금의 60%에 해당하는 감액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격 중소기업은 담보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액의 80%를 연기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올해 17%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며 2022~2025년 사이에 상품서비스세(GST)를 7%에서 9%로 인상될 예정이고, 2023년 1월부터 소액 수입 물품에 GST를 적용하고, 현재 육로 및 항로를 통한 수입품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GST가 적용되나, 이외의 4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항공 및 우편 운송 수입품에도 GST를 부과할 계획으로, 싱가포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소액 수입품 대상 GST 제도의 확대는 싱가포르 현지 판매업자들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이정현, 2021).
- 2021년 1월, 당국은 COVID-19의 심각한 영향을 받은 영세 및 소기업에게 부채 구조 조정을 돕거나 질서 있는 청산을 돕기 위해 단순화된 지급 불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함

3) 예산

- 싱가포르 2021년 국가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뉴노멀(New Normal)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4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1) 코로나 19 회복 패키지, (2) 가게 지원 패키지, (3) 경제 및 노동 변혁을 위한 투자, (4)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 등이 포함됨(허경선 외, 2021)
- 싱가포르 정부는 2월 16일 총 107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2021년 싱가포르

포르 예산안(Emerging Stronger Together)을 발표했고,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직접소득 지원, 고용 보전, 피해산업 지원과 같은 코로나 19 대응에 주력하였다면, 2021년에는 산업 및 노동력 혁신, 사회적 통합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부흥과 혁신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음(이정현, 2021)

- 싱가포르 정부는 COVID-19 Resilience Package를 통해 코로나19 테스트, 백신 접종 및 치료, 격리 시설 운영 등 공공보건 관련 지원에 48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고,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Jobs Support Scheme, SGUnited Jobs and Skills Package 등의 지원정책을 확대 및 연장 실시하기로 했고, 지난 2020년 5월 시행돼 작년 3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한 사업인 10만여 명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한 The SGUnited Jobs and Skills Package에 54억 싱가포르달러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20만여 명의 현지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고 기술교육 기회를 창출할 예정임(이정현, 2021)
- 싱가포르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상 및 정세 변화, 빈부격차 확대, 지속가능성 중요성 증대 등의 변화에 따른 기업구조 혁신 및 비즈니스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기업 활성화 및 근로자 혁신 지원에 향후 3년간 24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그 중 10억 싱가포르 상당은 Productivity Solutions Grant, Enterprise Development Grant, 스타트업을 위한 Venture Debt programme 등 각종 기업 대상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 실시하는데 사용될 예정임(이정현, 2021)
- 싱가포르의 세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global-Asia node’로서의 입지 강화하기 위해서 3가지의 플랫폼(기업 벤처 런치패드(Corporate Venture Launchpad), 오픈 이노베이션(OIP), 글로벌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GIA))를 통해 기업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지적 재산권 전략 2030’을 추진함(이정현, 2021)

8. 대한민국

1) 재정정책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최근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로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였으며, 사업자대출도 고금리업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 감소 피해가 크고,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함(오윤해, 2021)
- 3월 17일 국회는 2020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추경에는 세입 0.8조원 감소, 질병 예방 및 치료, 피해 기업 대출 및 보증, 피해 가구 지원, 피해 지역 경제 지원에 10.9조원 추가 지출이 포함됨
- 4월 30일 국회는 2020년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추경에는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8조원 증액이 포함됨
- 7월 3일, 국회는 2020년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35조 1000억 원의 패키지에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고용 및 사회 안전 확대, 질병 통제, 디지털 및 녹색 산업에 대한 지출 감소(11조 4000억 원) 및 추가 23조 7000억 원의 지출이 포함됨
-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한국형 뉴딜)의 개요를 발표했고, 이 패키지의 목표는 “경제를 빠른 추종자에서 리더로,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사회를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패키지에는 디지털 경제, 녹색 기술, 사회 안전망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포함되었고, 2020년(3차) 추경에는 총 6조 3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재정 투자와 함께 총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9월 22일 국회는 2020년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중소기업 지원(3조 9000억원), 고용지원(1조5000억원), 저소득층 지원(0.4조원), 어린이집 등 지원(2조원) 등에 7조8000억원이 추가로 투입함
-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2021년 예산 세입은 482조 6000억원으로 2020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2021년 세입 전망치보다 약 23

조원(GDP의 1.2%) 낮았고, 예산 지출은 558조원으로 2020년 예산안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약 11조원(GDP의 0.6%) 많음

- 2021년 3월 25일 국회는 14조9000억원(GDP의 0.8%) 추경을 승인했고, 조
치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 대한 구호, 고용 지원, 백신
보급, 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저소득 가구 지원이 포함됨
- 정부는 2021년 7월 1일 33조 원(GDP의 1.6%) 규모의 2021년 2차 추경안
을 발표했고, 추가 지출은 대부분 세수 초과 성과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
고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예상 전체 재정 수지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흑자에 의해 조달됨. 제안 내용은 코로나19 구호패키지(13조4000억
원), 방역대책(4조4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대책(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2조6000억원) 등으로, 또 기존예산에서 3조원을 주거비 등
기초생활비로 재편성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오
운해, 2021)
 -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황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
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
 - 코로나19 이후 피해 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의 일부를 저리 대환상품으로 대체하여 주되, 이후 고금리 대출의 추
가 이용을 제한
 -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
록 하여 부채총량을 줄이고,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
내하여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
 - 향후 금리인상 및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 자금에의 접
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
 -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
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여행업, 공연업 등은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
- 한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취업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 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함(오윤해, 2021)

2) 통화금융정책

- 한국은행은 2020년 코로나 19 대응 정책으로 지속적인 통화 완화 및 금융 시스템 유동성 축진을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5%로 누적 75bp 인하, 공개 시장 운영(OMO)을 통해 무제한 금액을 제공, 한은 결제 시스템의 순결제에 대한 담보 요건 완화, 국고채 매입(6.0조원, 2020년말까지 5.0조원 추가매입 발표)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중개대출지원시설을 총 18조원(GDP의 약 0.9%) 지원하고 금리를 0.5~0.75%에서 0.25%로 인하함
- 2020년 3월 24일 100조원(GDP의 5.3%) 규모의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했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긴급 대출, 부분 및 전체 대출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후자는 사례별로)에 대한 국유 및 상업 은행의 대출 확대와 대출 의무의 보증 및 담보
 - 회사채, 상업어음, 금융채를 매입하기 위한 채권시장안정기금
 - 담보부채권 및 직접채권매입을 통한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조달
 - 주식금융 대출 및 공공금융기관의 리파이낸싱 지원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자금조달
- 2020년 4월 22일 회사채 및 상업어음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10조 원)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추가자금(10조 원) 조성을 중심으로 총 25조 원

(GDP의 1.3%)에 달하는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고, 수출업체 및 특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발표되었음.

- 4월 8일 무역신용의 한도 및 만기 확대, 무역보험 확대 등 수출자금조달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총 36조원(GDP의 1.9%) 규모의 대책을 발표
- 4월 22일 산업은행이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종합기계 등 7개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GDP의 2.1%) 규모로 산업안정기금을 조성
- 전력 및 통신 분야에서, 자금 지원은 국고채 발행과 민간자금 출연으로 마련되고, 대출, 지급보증, 투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은 고용 유지와 함께 임원 보수 및 배당금 등 지급을 제한하고 향후 기업 정상화에 따른 혜택을 공유
- 기타 정책들은 회사채를 담보로 한 비은행 대출 프로그램 신설,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한시적 완화 자사주매입 규정,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대율 한시적 완화등이 포함됨
- 한은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에 양자 스왑 라인을 개설함. 외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기타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외환 선도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자본금의 50%(기존 40%), 외국계 은행은 250%(기존 200%)로 인상
 - 금융기관의 단기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0.1%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유예
 - 은행의 최소 외화유동성보상비율을 일시적으로 70%(기존 80%)로 낮추고 한은은 또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을 받기 위한 레포(Repo)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함
- 한국에서는, 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경기부양을 위해 몇 가지 금융정책을 시행하였고, 4조원 규모의 1차 금융부양책에는 내세와 지방세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포함되었고, 2020년 추경 예산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가장 심각한 지역에 11조 7천억 원 지원과 함께,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한국 뉴딜정책에 포함되어 있음
- 한국에서는, 2020년 7월에 발표된 한국 뉴딜 정책이 160조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이 정책은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며 도시와 시골 지역 간의 불균등한 개발을 시정하기 위해 녹색 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 균형 뉴딜의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축됨

- 뉴딜정책은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총예산의 절반을 투자함으로써 향후 경제발전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방 프로젝트에는 스마트 시티 개발 및 자연재해 관리 시스템과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이고, 2021년 3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자체 뉴딜계획을 수립해 강원도의 수소연료 관련 기술개발 사업 등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중앙정부는 균형 잡힌 뉴딜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한국 뉴딜 관련 이슈를 처리하는 데 지자체를 지원하고 관련 이슈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데 도움을 줄것임. 중앙정부는 114조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됨

제3장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지원 정책

- 외채(아시아 외환위기), 가계부채(글로벌 금융위기), 정부부채(유럽재정위기)의 과거의 경제위기는 주로 과도한 부채누적에 따른 금융부실에서 시작하여 실물로 확산되었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시작되었음(박성욱, 2020)
 - 확실한 치료제/백신 부재 → 방역을 위해 봉쇄 · 사회적 거리두기 · 이동제한 불가피 → 경제활동 위축(기회비용)과 함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경제성장 위축이 발생(박성욱, 2020)
 - 생계비 · 고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소득 ·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여 가계 · 기업의 유동성위험 및 채무불이행 위험 확대되고, 성장둔화, 유동성 · 채무불이행 위험 확대, 불확실성 고조로 실물에서 금융으로 경제 위기가 2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박성욱, 2020)
-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특성상 주요국 코로나19 정책 대응은 가계 · 기업의 지원 · 보호 및 시장안정에 주력하였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계 · 기업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하였다는 관점에서, 가계 ·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즉 구제(relief) 혹은 보호(protection) 정책을 우선시 되었고, 실물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2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 금융위기에서처럼 금융시장 안정 조치 시행과 총수요 확대를 위한 부양정책은 방역 정책과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이 필요하였음(박성욱, 2020)
-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 · 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강구상외, 2020).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2019년 GDP 대비 미

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위의 집행 규모임

-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 및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가포르 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 통화금융 정책으로,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강구상외, 2020).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고,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나,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추진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

○ 각 나라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각종 금융회사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하였음

<표 2> 일시적인 각종 금융규제 완화

구분		프로그램	운영주체	대상 및 방식	프로그램 기간
미국		■ 보편적 SLR 산정기준 완화	연준	국채,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SLR 산정	-21.3.31 종료
		■ eligible retained income 정의 변경 ■ CECL 적용 유예 ■ 지역은행 규제비율 완화	연준, FDIC, OCC 등	자본규제에 이용되는 산식 변경, 회계규정 적용 연기,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등	
		■ 부실대출 분류기준 완화	연준, FDIC, OCC 등	연체 분류조건 완화	
유럽		■ 자본규제 완화	ECB Banking Supervision	일시적으로 은행이 P2G, CCB, LCR에서 정의된 자본 수준 이하로 운영 허용	
		■ 검사 유연화 ■ 배당자제 권고 등		검사일정 연기 등 유연화, 배당 자제권고(21.1.1일까지) 등	
		■ CCyB 조정	거시건전성 감독당국	대부분 국가에서 CCyB를 0%로 조정·유지	~진행 중
아시아	일본	■ 기존 금융규제·감독 유연 적용 발표	금융청	자본보전 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 등 완충자본 사용(발표), LCR 규제 유연 적용, 보증대출 위험가중치 0% 적용	
	중국	■ 기존 금융규제 유지	CBIRC	LCR 규제 완화 X	
		■ CCyB 유연 적용	PBoC, CBIRC	CCyB를 0%로 설정, 제도시행	‘20.10.1일~
	싱가포르	■ 규제비율 조정	MAS	CCyB 한시적 완화 대손적립금 자본인식 비율 변경 NSFR 비율 완화	유지 중 ~ ‘21.9.30일까지 ~’ 21.9.30일까지
		■ Basel III 도입 연기		은행에 대한 Basel III 도입 1년 연기	연기 중

자료: 김영도, 2021.

1) 단기 대책 개요

- 정부들의 경제정책 대응은 신속하고 광범위했는데, 지금까지의 재정 패키지는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가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국가의 생산 능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 국가들은 위기에 대한 비상 대응에 집중함
 - 국가들이 도입한 조치는 위기가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완충하고 경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
 - 재정 패키지는 국가 간에 매우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즉, 봉쇄 및 완화 조치의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완충하고 최악의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계와 기업이 가능한 한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 기업의 경우 이는 종종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구에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많은 국가에서도 의료 부문의 기능과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
- 국가별로 재정 패키지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상존함
 -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는 세금 납부유예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 간에 상당히 유사했고, 단시간 근로제도의 도입과 확대
 - 가구 지원을 위한 조치 간에는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직접 현금 이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 병가 및 실업 수당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지원을 확대
 - 사회 부조 조치(현금 송금 포함)는 사회 보험이나 단시간 근로 계획보다 훨씬 일반적인 조치와 함께 납세 연기 제도를 도입
- 재정 패키지는 국가마다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전혀 없는 조치를 취하였고, 중요한 재정 정책 패키지가 독일, 영국, 미국에서 도입되었고, 전반적으로 재정 패키지는 공공 예산과 부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재정정책 수단의 도입 된 통화 및 금융 정책에 의해 지원 범안에는 세금 신고 마감일 연장, 세금 납부 연기, 더 빠른 세금 환급 제공, 관대한 손실 상쇄 조항, 사회 보장 기여금, 급여세 또는 재산세를 포함한 일부 세금 면제가 포함됨
- 봉쇄 및 완화 후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자극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강한 지속적인 지원과 점진적인 회복으로 전개해야 하고, 부채 상환은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봉쇄 및 완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거나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경우 공급 충격이 지속되고 생산성이 감소할 수도 있음. 경기회복이 부진할 경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장기간의 봉쇄 및 완화 조치는 기업과 가정에 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격리 단계가 연장되면 일자리 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기업 파산은 기업 및 근로자 고유 자본(즉, 기업가, 고용주, 직원 및 고객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비공식 지식, 관행 및 역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데 시간이 소요
 - 부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채무불이행, 접는 사업으로 인한 기업대출 채무불이행도 실물경제 위기를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위험
- COVID-19 위기에 대응하여 현재까지 도입된 단기 세금 및 재정 조치
 - 기업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
 - 투자 및 소비 지원을 목표로 한 조치
 - COVID-19에 대한 의료 부문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IMF에 따르면 전세계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사용된 재정 정책 수단의 빈도는 지출 측면에서는 임금보조금, 가계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 실업보험 확대와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이 높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유예 및 감면이 빈번하게 활용되었음(박성욱, 2020)

2) 기업 지원 대책

- 억제 단계가 계속되면 유동성 문제와 함께 지급 여력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및 기업 수요의 강력한 감소가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이 상당한 유동성 지원이 있음에도 파산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 OECD 및 G20 국가의 대부분의 단기 조치는 기업이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임금, 임대료, 부채 이자 및 세금을 지불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많은 조치가 근로자 해고, 일시적인 공급업체 또는 채권자 지급 불능, 최악의 경우 폐쇄 또는 파산과 같은 문제 확대를 피하기 위해 현금 흐름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비조세 조치와 관련하여 OECD 및 G20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정부가 적격 기업에 부여된 은행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는 대출 보증 제도와 함께 소액 무이자 대출 및 현금 보조금이 포함됨
- OECD 및 G20 국가에서 기업 현금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조세 조치는 세금납부 유예로, OECD 및 G20 국가의 4분의 3이 세금납부 연기를 도입하였고, 세금 유예 조치는 일반적으로 선지급 법인 소득세(CIT), 개인 소득세(PIT), 부가가치세(VAT) 및 사회 보장 기여금(SSC)에서 도입됨
- 손실 상쇄 조항의 변경은 또 다른 중요한 세금 정책 도구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한 결손금 이월을 허용하는 조치를 도입했거나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이전 회계연도에 얻은 이익에 대해 2020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음(예: 미국). 다른 국가에서는 2020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 이월 기간을 늘리고 있음(예: 중국).
- 소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추정세 면제 및 수도세와 차량세 감면이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 및 항공사에 대한 특정 부과금도 면제했으며, COVID-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SME), 자영업자, 관광과 항공사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추진함
-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도입

하였는데, OECD 및 G20 국가 중 많은 국가에서 단기 근로 제도에 대한 자격을 도입, 연장, 확대함

○ 대출·보증 확대, 현금 지급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금 등의 유예·감면을 통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대출뿐 아니라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지원을 한시 도입함(박성욱, 2020)

- “미국 중소기업청의 경제손실재해대출은 일시적인 수입감소를 겪는 소기업 및 농업기업에 지원하고 \$1만까지 상환면제”
- “독일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대상 3개월 운영비를 종업원 5인 이하 기업은 최대 €9천, 6~9인 기업은 최대 €1.5만까지 지원”
- “영국은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영업소득 감소 보상제도 도입”

○ 대출 및 투자 지원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대상으로 대출, 보증, 지분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유예(미국, 독일, 영국), 부가세 인하(독일), 전기세 감면(독일) 등을 통해 기업의 지출 부담을 경감함(박성욱, 2020)

- “미국은 직원 1.5만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메인스트리트대출을 도입하고 대기업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으로 지원”
- “독일은 정책금융기관인 KfW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신규 온랜딩 대출을 도입하고 대기업은 경제안정화기금을 통해 채무보증, 자본확충,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 공급”
- “영국은 중소기업에 1년간 대출이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80~100%의 정부보증을 제공하고 대기업에는 80% 정부보증을 제공하며 스타트업·혁신기업의 투자를 유도”

3) 가계 지원 대책

○ 많은 국가에서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이 확대되었고,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서 세금 감면보다는 대상 현금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자영업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대부분의 가구 지원은 취약 가구에 대한 현금 혜택 증가로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한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강화된 현금 혜택을 통해 가계에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많은 OECD 및 G20 국가에는 질병, 실직, 소득 감소로 영향을 받는 가구에 소득 대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많은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자동 안정 장치 역할을 함
-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 송금이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예: 아픈 근로자) 또는 임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자영업자에 지원(예: 영국)하고, 저소득 가정에 보다 광범위하게 현금 지급을 제공함
- OECD 및 G20 국가의 3분의 1 이상이 실업수당 적용 범위를 확대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는 실업 수당의 적용 범위를 자영업자까지 확대됨
- 반면, OECD 및 G20 이외의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병가 또는 실업 수당의 확대를 보고하지 않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사회 보장 시스템이 덜 발달된 경향이 있고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로 현금 이전에 의존한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유급 병가 및 실업 수당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OECD, 2020)
 - OECD 및 G20 국가의 약 30%가 병가 혜택을 확대
 - 일부 국가에서는 덜 제한적인 접근 조건(예: 혜택을 받기 전 대기 기간의 제거 또는 감소, 진단서의 필요성 제거)을 도입하고 자격을 확대(특히 자영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근로자에게도 적용)
 -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혜택의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보통 초기 병가 기간을 부담하는 고용주의 부담 감소), 고용주가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의무가 없는 경우, 새로운 요구 사항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뉴욕주 고용주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의 경우에 의무적 또는 예방적 격리 또는 예방 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병가를 제공

- 사회 보장 시스템은 가계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업 수당은 실직한 사람들의 이전 소득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수당을 보다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가는 실업 수당 수령인에게 적극적인 구직을 지원하고 요구하는 “능동적인” 고용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회복이 느리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면 공공 고용 서비스는 노동자가 양질의 훈련에 등록하여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개발하기 위해 생산적으로 더 긴 실업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현금지급, 실업수당 등 복지확대, 세금 및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가계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 완화,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실업보험 등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하되, 부족한 부분은 한시적인 제도를 신설함(박성욱, 2020)
 - (현금지급) 전국민(홍콩, 싱가포르, 일본) 혹은 대부분(미국)을 대상으로 일정액 혹은 자산/소득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감소를 완화(박성욱, 2020)
 - (고용유지지원) 기존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완화(독일)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미국, 영국)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보상하거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 지급(박성욱, 2020)
 - (실업수당 등 복지확대) 실업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수급기간 및 수급대상을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등에게까지 확대(미국)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 혹은 지원조건을 완화(독일, 영국)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박성욱, 2020)
 - (납부유예 및 감면) 개인 및 법인소득세, 지방세 납부유예(미국, 영국), 주택임대료, 공공요금 납부유예(독일, 일본), 주택모기지 상환유예 혹은 연체시 담보권 행사 중지(미국, 영국) 등을 통해 가계의 생활비 지출 부담 경감(박성욱, 2020)

제2절 정책 대응

○ 4가지 정책 단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유동성 및 소득지원에 중점을 둔 발병에 대한 초기 대응
- 2단계: 봉쇄 및 완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
- 3단계: 2단계와 동시에 회복과정에서 일부 경우에는 억제 및 완화 조치가 필요
- 4단계: 궁극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공공재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 초기 대응인 1단계에서 세금 시스템은 기업과 가계에 신속하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임

- 조세정책은 세금, 지출, 건강, 금융 및 통화 정책을 결합하는 전체 정책 패키지의 일부
- 국가들은 봉쇄 및 완화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활동이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
- 단기 재정, 통화, 금융 정책은 사업 유동성을 유지하고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데 중점

○ 2단계에서는 억제 및 완화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세금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조세 정책은 경제적 회복 능력을 유지하는 데 계속 초점
- 비즈니스 측면에서 유동성 위협의 해소
- 봉쇄 조치들이 오래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지원이 제공되더라도 유동성 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데, 수단에는 무이자 대출과 유사할 수 있는 세금 납부 연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기여금 및 세금을 면제
- 가계에 대한 지원 강화는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실직 및 소득 손실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도움

○ 3단계는 투자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는 회복 단계임

- 기업 및 가게 부채 증가, 폐업 및 실업 증가,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는 미래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경기회복이 부진한 경우 소비와 투자 확대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 유지
-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전환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봉쇄 및 완화 조치는 점진적으로만 제거되는데, 이는 기업과 가정 전반에 걸쳐 경제적 영향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국가나 지역에 따라 완화 속도와 정도가 다르면 공급 충격이 지속 되어 생산성이 저하
-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때, 봉쇄 단계에서 도입된 단기 조치의 제거는 여러 기업과 가정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받았는지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 조치는 재정 부양책을 늘릴 여력이 있는 많은 국가에서, 제한적인 재정 부양책이 위기를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부채 상태를 악화시킨 글로벌 금융 위기(GFC)의 교훈을 배워야 하고,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거나 특정 부문이 수요 증가에 직면할 경우 경기 부양책의 조정이 필요
- 4단계에서는 공공재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금 정책에 주안점을 둬
 - 초기 단계에서 기업과 가게에 제공된 지원 조치로 인해 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
 - 경제가 회복되면 국가는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고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분배 문제 및 기타 장기 위험(예: 기후 위험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수익 증대는 성장 포용성 및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하도록 수행
- 기업과 가게에 대한 지원 조치는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위기가 진정되는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함
- 세금 정책은 의료 정책, 무역 정책, 사회 및 노동 시장 정책, 금융 및 통화 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 수단과 조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지출이 가게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유사하게, 세금 정책은 목표 조치를 통해 비즈니스 현금 흐름을 지원

할 수 있지만, 기업 부채 부담 및 기업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

- 재정정책은 또한 통화 정책과 조정되어야 하고, 통화 당국이 재정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국채와 민간자산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 금리 인하와 대규모 자산 매입 조치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경제 활동 및 고용의 둔화는 소득세 징수 및 사회 보장 지불을 줄이거나 연기하여 기업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 기여금 및 급여세 영수증을 감소시키고, 법인세 수입도 2020년에 발생한 손실이 일반적으로 이월되어 미래 소득에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한동안 침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 소비는 봉쇄기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약 1/3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산세는 경제 주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봉쇄 기간 동안 도입된 다양한 조치가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관광세, 항공세 및 숙박세 감소의 형태로 직접적인 손실을 포함하여 관광 및 여행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물론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통한 간접적인 손실을 포함함
- 평균적으로 세수와 GDP의 추세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GDP 성장이 제한적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세수는 GDP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많은 국가가 무역 및 국제 거래에 대한 세금 수입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및 국내 무역의 급격한 감소는 개발도상국의 수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관광 부문이 큰 개발도상국(예: 군소도서 개도국)도 상당한 수입 감소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수입 손실은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위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와 소비세에 대해 선진국보다 더 의존적임. 중국의 경우와 같이, 제한된 수의 OECD 및 G20 국가에서 수입세 면제 및 일시적

인 표준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 촉진을 지원함

- 국가별로 기존 제도에 따라 대응 방식도 상이한데, 고용시장 충격에 대응하여 독일은 기존의 조업단축 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반면, 미국은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주로 기존 실업보험 제도의 확대를 통해 대응하였고, 미국의 대응 정책은 연준의 유동성 공급 및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해 다양한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해 신용시장 안정에 기여함(박성욱, 2020)
-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의 일반적인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을 추진하였고, 독일은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프랑스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강구상외, 2020)
 - 미국과 유럽 등의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적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였는데, 미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은 유사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성 지원의 규모와 방식 및 대상 선정의 차이일 것임(김준헌외, 2021:19).
 -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를 정책적으로 사용하여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유로지역의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재정위기의 기억,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부재,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인해 무차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음(김준헌외, 2021:19).
 - 유로지역의 국가들이 무차별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

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지원을 한 이유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직접지급정책이 미래에 불러올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재정공간의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김준현외, 2021: 19)

- 미국과 다른 경제·사회보장시스템과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과도한 적자재정을 경계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김준현외, 2021: 19)

-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본은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고, 싱가포르의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였고, 중국은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및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였음(강구상외, 2020)

○ 거버넌스는 회복력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설계할 때 핵심이며 국가는 거버넌스 수준과 개발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회복 단계의 정책적 노력은 미래의 건강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첫째, 질병감시 메커니즘과 건강정보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
- 둘째, 위기는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과잉 또는 적응 능력을 갖춘 적응형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
- 셋째, 국제공동대응을 통해 진단·치료제·백신의 개발을 개선하고, 최종 승인도 되기 전에 생산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
-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기는 의료 시스템의 회복력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보편적 의료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의료 부문에 대한 추가 공공 투자가 필요

-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은 정책의 조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데, 자동 안정 장치는 위기의 영향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고, 투자 인센티브는 미래 충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미래 위험(예: 건강 관련 및 R&D 투자, 재택 근무, 저탄소 기술)을 줄이는 투자로 기업을 이끌 수도 있음

제3절 각국의 조세정책 대응에서 얻은 교훈

- 국가는 재정, 통화 및 금융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였고, 각국의 조세정책 대응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속하였음. 일부 국가는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초기 구호 패키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및 확장하는 단계적 진행을 진행했으며, 이는 위기와 관련된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 할 때 적절해 보임
- 대부분의 단기 조치는 일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및 재정 지원 수단(예: 세금, 혜택, 대출 보증)을 결합하여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함. 기업을 지원하는 단기 조치의 목적과 설계는 일반적으로 적절해 보이고, 특히 세금 유예를 통해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대다수 국가에서 최우선 과제였음. 세금 유예 및 추진 연기는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세, 급여세, 관세 및 소비세와 같이 기한 내에 납부 해야 하는 세금에 적용될 때 적시에 현금 흐름 지원을 제공하는 데 특히 유용함
-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는 2008-09년 경기 침체 기간 동안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입증되었고, 실제로 OECD 분석에서 2008-09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이러한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에게 소득지원을 제공하면서 실직을 크게 줄였음
-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필요성은 많은 국가에서 빠르게 해결되었고,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은 국가 정책 패키지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였으며, 대상의 수준과 유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가장 취약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는 가구(병자, 실업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많은 국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병가와 실업수당을 확대하였음

1) 예산 수지 및 공공 부채에 미치는 영향

- 위기는 국가의 예산 수지와 공공 부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재정 패키지 비용,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 지출 증가, 위기로 인한 세수 손실의 결합된 효과는 정부 차입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재정 수지와 공공의 악화로 이어짐. 참고로, 글로벌 금융 위기(GFC) 기간 동안 재정적자는 급증하여 2009년 OECD 국가 평균 GDP의 8.7%에 도달하였고 공공 부채 수준은 2007년 평균 GDP의 73%에서 2011년 101%로 증가했음. 2020년에는 COVID-19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이 GFC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증가하는 재정 적자의 결과는 높은 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심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OECD 전체에서 일반 정부 총 부채는 에스토니아 GDP의 13%에서 2019년 일본 GDP의 225%까지 다양함(OECD, 2020).
- IMF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과감한 재정책대 정책으로 2020년 선진국 재정적자/GDP는 10.7%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적자 규모인 8.7%를 상회할 전망이고, 2020년 국가별 재정적자/GDP 규모는 미국 15.4%, 영국 8.3%로 확대되고 전년에 흑자를 보이던 독일과 한국도 각각 5.5%, 1.8%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고, 이에 따라 선진국 정부부채/GDP 비율은 122.4%로 2019년(105.2%)에 비해 17.2%p 증가할 전망(박성욱, 2020)
- 급격히 증가하는 지출 요구와 감소된 수입의 조합은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저소득 국가의 경우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건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이들 국가는 특히 금융 부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제 부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차입 비용의 잠재적인 증가는 수년간 저금리로 축적된 재정적 취약성을 노출시킬 수 있고, 높은 부채 수준은 또한 2030년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투자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임
- 이행기 단계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던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공

동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중앙은행이 회사채 및 대출 등 신용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부채 적정화는 포스트 코로나 단계의 주요 과제로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된 각 경제주체의 부채 규모를 감염병 위기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박성욱, 2020)

2) 위기에서 회복과정에서 점진적인 단기 조치를 완화

- 단기 조치의 제거는 세금 부채의 급증을 방지해야 하고, 세금 유예와 같은 조치는 여러 과세 연도에 걸쳐 세금 납부를 분산하고, 수년에 걸쳐 과세 기준을 평균화하고(매출세 또는 SSC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이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 격리 및 복구 정책이 공존할 수 있는데, 봉쇄 및 완화 조치의 완화 속도와 정도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공급 충격과 비즈니스 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데, 따라서 봉쇄 및 복구 지향적인 지원 조치의 혼합은 현재 시행 중인 봉쇄 및 완화 조치의 성격과 밀접하게 일치해야 함
- 가구 지원은 덜 부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이것은 더 포괄적일 수 있으며, 다른 가계에 비해 재정 부양 패키지를 통해 받는 추가 가처분 소득을 저축하는 것보다 저소득 가계가 지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하므로 승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봉쇄 및 완화 조치가 점진적으로 제거되면 세계경제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일부 단기 조치를 신중하게 제거
 -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곳에서 경기부양책을 목표로 설정
 - 경기 부양 정책은 포괄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
 - 필요와 사회적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지원을 목표
 - 궁극적으로 국가의 건강 및 경제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정책
- 경기회복이 빈약한 경우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의 확

장 재정정책 이 필요할 수 있는데, 코로나 위기는 봉쇄 및 완화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을 넘어 더 광범위한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음. 억제 단계에서 기업, 가계, 금융 부문에 의해 축적된 부채는 이러한 부채가 상환되는 동안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3) 위기 이후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혁 방안 모색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제로금리, 추경을 통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금융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정화 조치 등은 실물경제의 위축 완화와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에 기여함(최홍식외, 2021)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대응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허진욱, 2021:76)
 -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임.
 -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를 활용하고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과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은 거시경제적 하방위험을 대폭 완화하였고, 항공, 운송, 음식숙박업 등 일부 내수업종을 제외한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기반 서비스의 확대, 반도체 및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은 전체 경제의 위축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함(최홍식외, 2021)
- 한편, 세수는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과 위기 동안의 정책 조치로 인해 수년 동안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많은 단기 조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업 수당을 통한 장기간의 가계 부양이 노동 시장 활성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연장된 임금 지원은 또한 특히 실업 수당의 순 대체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직원 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음 (OECD, 2020)
 - 기업에 대한 확장된 지원은 봉쇄 및 완화 조치가 없었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좀비'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세금 감면 및 연기는 또한 중기적 수익 창출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음
 - 소비 및 투자 상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 회복의 열쇠로,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와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경기부양책은 위기로 인한 산출 격차의 크기에 따라 여러 국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재정 부양책은 일시적·효과적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적자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저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부양이 소비 수요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봉쇄 조치가 예기치 않게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 정책 입안자는 억제된 수요와 경기 부양 조치의 조합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경기 부양 조치가 잘못된 투자나 자산 거품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기부양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함(허진욱, 2021:76)
- 앞으로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와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당분간 유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부채의 상승 우려와 잠재성장을 하락 및 고령화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유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최홍식외, 2021)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영되었던 재정

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구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음(허진욱, 2021:76)

-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허진욱, 2021: 76)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사회적 변화 및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하고, 재정 확대는 세수기반 강화와 연금확충 등 장기적인 재정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금융시장의 변화에도 계속 대응해 나가야 하고,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 부채관리의 필요성도 커질 것임(최홍식외, 2021)
-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과 더불어 자산가격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 규모 축소 등 현재의 완화기조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금리인상에 앞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미래 경제 여건을 선반영하는 시장금리는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급증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장민, 2021)
- 세금 정책은 위기의 비용을 충당하고 재정 건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기여할 것인데, 국가들의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과정으로, 공공 재정 복구를 위한 노력이 너무 일찍 시작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고, 국가가 공공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세금은 세입 수준과 재정 건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시대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지속적인 경제 부양책을 통한 견고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장기적으로 세금 정책에 대한 제언에서 주요 전쟁이나 주요 재정 위기 이후에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제안 및 기존 시스템의 세금 시스템 수정이 포함될 수 있고, 정부가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반복적 세금 및 일반 소비세를 포함하여 성장에 가장 해가 되지 않는 과세 기반에서 세입을 늘리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공공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여 추가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 기간은 세금 개혁을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사용해야 함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20). 영국 정부 및 감독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경제전망. 런던 사무소.
- 기획재정부 (202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Vol. 89, 2021. 06.
- 구윤모 (2021).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Vol. 88, 2021-5월, 기획재정부.
- 김규판 (2021).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미루·오윤해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2020. 12.
- 김영도 (2021). 코로나19 대응 경제·금융여건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 김준현 (2020).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05.
- 김준현, 박인환 (2021).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NARS현안분석 제214호, 국회입법조사처.
- 강구상, 최원석, 김종혁, 오태현, 이현진, 김승현, 박나연 (2020).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3. No.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유덕 (202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EU 회원국의 국가채무 변화와 EU의 경제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EU연구, 60: 43-82.
- 곽미성 (2021). 하반기 프랑스 경제 전망 및 정치경제 이슈,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7.0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각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동향, 6~7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포커스. 3(11).
- 문지영 외 (2021).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 박성욱 (2020).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9):1-34. 한국금융연구원.
- 박충렬 (2021). COVID-19 피해기업 손실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 05.
- 지성현 (2020). 코로나19에 대한 주요국의 재정정책 관련 대응, 지방재정 2020권3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정지현 외 (2020).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3 No.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영욱 (2020).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규한 외 (2021).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국제경제리뷰 제2021-3호, 한국은행.
- 이정현 (2021). 2021년도 싱가포르 예산안 및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03. 23.
- 이재윤, 김준현 (2020).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697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태훈 (2020).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 83-85.
- 오운해 (2021).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윤성주 외 (2021). 재정동향, 2021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윤성주 외 (2021). 해외재정동향 및 이슈분석 2021년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윤성주 외 (2021).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보고서 2021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여유진 외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평가 연구(종합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07.
- 영국 BOE 통화정책 (2021). 주요국가 통화정책, NANUM TRADING, 2021.12.08.
- 임종수 (2021). 영국 2021-22 예산안 및 재정운용계획 발표, 2021.03.
- 안성배 외 (202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21 No.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상봉 (2021). 코로나19 대응 자영업 현금 지원 국제비교, 『월간 노동리뷰』 (2021년 2월호), 2021. 02.
- 홍성창 외 (2021).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신흥방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시사점, KDI 한국개발연구원.
- 허경선 외 (2021). 아시아 재정브리프 Vol.1 No.1 2021년 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허진욱 (2021).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싱가포르 재무부(MOF) (2021). Budget 2021,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 장민 (2021).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과 가계부채 리스크, 예산춘추 2021 VOL. 63, 국회예산정책처.

- 최홍식, 구본성 (2021).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KIF 금융분석리포트 2021-06, 한국금융연구원.
- 채민석 (2021). 코로나19와 영국의 통합급여,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21. 06.
- Alexander, L., Amemiya, A., Dent, R., Lee, K.(2020), “US: Congress Provides Additional Pandemic Fiscal Support” , First Insights, Nomura Global Markets Research.
- CBO (2021).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Updated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 07.
- CBO (2020). The Effects of Pandemic-Related Legislation on Output, 2020. 09.
- Chetty, Raj, John N. Friedman, Nathaniel Hendren, Michael Stepner, and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 (2020).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 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Working paper, 2020. 11.
- Christina D. Romer. (2021). The Fiscal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21. 03.
- Erica York · Garrett Watson. (2020). COVID-19 Relief Package FAQ, Tax Foundation, 2020. 12.
- European Parliament. (2021). US Macroeconomic Policy Response to COVID-19: Spillovers to the Euro Area, 2021. 06.
- Feroli, M. (2020). “US: Fiscal Issues Facing the Biden Administration” , Global Data Watch, J.P.Morgan Economic Research.
- Giovanni Dell’ Ariccia, Paolo Mauro, Antonio Spilimbergo, and Jeromin Zettelmeyer. (2020). Economic Policies for the COVID-19 War, IMF, 2020. 4.
- IMF. (2021). DATABASE OF FISC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2021. 07.
- IMF. (2021). IMF Fiscal Monitoring: A Fair Shot, 2021. 04.
-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04.
-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0. 06.
- Karl Whelan. (2021). Implications for the Euro Area of US Macroeconomic Policies, European Parliament, 2021. 06.
- Kureshi, S., Williams, R., Sheth, A., Bokil, M., Foster, W. (2020). “New Pandemic Aid Package Will Buffer Economic Recovery from Virus Resurgence” , Moody’ s Investors Service.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Consumer Response to Economic Impact Paym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ole of Subjective

- Assessments of Well-Being: A View from the U.S. Using a Rapid Response Survey, 2021. 04.
- OECD. (2021). Tax Policy Reforms 2021: Special Edition on Tax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1). The State of School Education: One Year into the COVID Pandemic,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0).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2020. 06.
- OECD. (2020). Beyond Containment: OECD, OECD, Paris.
- OECD. (2020). OECD Best Practices for Managing Fiscal Risks: Lessons from case studies of selected OECD countries and next steps post COVID-19, OECD.
-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 World Bank. (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1.